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1995. 12.

鄭永泰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김일성 死後 김정일이 ‘얼굴없는 통치’를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통치능력과 향방에 대한 추측이 분분해 왔다. 그 중에서도 김정일의 통치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부류의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을 아주 신빙성 있게 거론한다. 이들은 김정일 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군부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언론들도 김일성 사후 북한 군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정일이 ‘얼굴없는 통치’를 행해 오는 동안 그의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 선전이 상당부분 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김정일이 공식방문 활동시에도 군부의 중요인물을 대동한 사실이라든가, 공식행사 참가 명단 서열에 있어서도 군부인물의 서열이 상당수 상향 조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 군부의 浮上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政治變動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향후 김정일 정권의 장래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이라는 題下의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

던 추측과 산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몇몇 징후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 군부의 역할과 군부 쿠데타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북한 군부와 관련한 체계적 판단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 군부의 역할을 黨·軍關係의 지속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북한 연구와 관련하여 자료의 결핍은 모든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문제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준 것이 바로 귀순자 김정민·강명도 씨의 정성어린 증언들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들에 대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외에도 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연구실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1995. 12.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현재까지 여러 학자나 언론들이 북한의 정치적 변동에 대한 주요 행위자로 가장 비중있게 지적해 온 것이 바로 軍部이다. 김정일 정권이 군부 쿠데타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구소련에 있어서 급진적인 체제변화를 겪었던 과정에서 軍部の 介入(military intervention)을 부추키게 될 충분한 動機(전반적인 사회적 不安定 및 脆弱한 政治 및 經濟的 制度)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당)·군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부가 체제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假說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기에서 북한의 군부는 과연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군부는 체제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지닌 김정일 정권하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가? 본 연구는 ① 북한의 민(당)·군관계의 특성, ② 김정일 정권하의 민(당)·군관계의 持續과 變化, ③ 북한 군부의 쿠데타 可能性과 그 類型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위의 質問에 답하고자 하였다.

1. 理論的 背景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군부 역할은 주로 두 가지 모

델에 의해서 분석되어 왔다. 콜코비츠(Roman Kolkowicz)의 葛藤모델과 콜튼(Timothy Colton)의 參與모델이 그것이다. 갈등모델은 형식적인 통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비해, 참여모델은 비형식적인 통제체계와 군과 정치권 전체(당)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의 당·군관계 규명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시도는 주로 구소련(부분적으로는 중국) 특히 브레즈네프 시대의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제약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부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전염병처럼 확산되었던 군부 쿠데타와는 무관하게 비교적 군 자체의 임무에 머물러 온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군부의 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모델이 유효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당·군관계에 있어서 당에 의한 군통제를 강조하는 갈등모델적 특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 군대 내에 배치된 정치 및 당조직은 엄밀히 말해서 갈등모델이 설명하는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당·군관계는 시기에 따라 달리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체제 공고화 단계에 있어서 북한의 당·군관계는 갈등모델적 속성이, 유일지배체제 유지 단

계에 있어서는 참여모델적 특성이 강화되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초점이 모아졌다. 북한에 있어서 여타 제3세계 국가와는 달리 성공적인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정치변동을 겪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함으로써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과 군부의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인가?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을 의미하는 군부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군부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2. 북한의 黨·軍關係 특성: 당·군의 융합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김정일) 개인을 위한 私兵과도 같은 존재로서 그 역할은 수령에 대해 종속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측면을 지닌 특수집단으로 인식된다. 북한 인민군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이고 김일성주의(주체사상)의 보호자이며,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무력집단으로서 김일성 정권의 기반을 강화해 주고 있는 核心要素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철저한 성분조사를 통하여 아주 선택적으로 군대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인민군은 스스로 당과 김일성의 혁명과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며 사상

적으로 인정을 받은 집단이라는 우월감을 가짐으로써 당과 수령에게 최대한의 충성을 바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은 그 자신에게 인민군의 절대적인 충성을 유도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군대 내부에 정치 및 당조직 기구를 설치하여 黨事業에 대한 군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군을 통제·관리하는 소위 ‘黨·軍 一元化體系’를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군대 내의 정치 및 당조직기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 콜코비츠가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독자 세력 형성으로 당정책지도 노선을 위협하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군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군내부의 특수 조직으로서의 적극적 통제기능과, ② 정치사상화교육을 통하여 군을 당사업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군대의 단결, 사기진작, 당·군의 일체화를 도모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일적 권력체계 강화와 김정일 권력승계 구축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당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약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군부의 영향력 약화는 체제가 안정화되어 가면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의 권력공고화 단계를 거쳐서 1970년대부터는 공고화된 유일적 권력체계를 관리·유지하는

體制維持 段階(system maintenance stage)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북한 군부엘리트들이 당정치국 정치위원에서나 서기국 비서직에서 점차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군부의 당적 역할에 대한 완전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부의 고위 지도자들은 군사고유의 업무를 관장하는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군사관련 전반적인 당적 사업을 수행해 왔다.

북한의 당·군 지도부는 점차적으로 거의 동질적인 가치를 수용하게 되는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군에 대한 당의 획일적인 통제를 위한 감시 및 사찰기능만을 강화해 왔다가 보다는 당에 의한 전사회단체 통제의 일환으로 군대의 당 및 정치조직을 통한 군의 견제와 군의 당사업(정치사상화)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당·군융합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가 병영사회라는 일반적 견해를 수용할 때, 병영사회에서의 군부의 잠재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추측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부의 잠재적 영향력을 당으로 하여금 흡수토록 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당·군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 성공적인 군부 쿠데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당에 의한

군부의 인위적인 통제의 영향에 더하여 당의 지도체제를 근간으로 한 당·군 융합체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당에 의한 군부의 통제장치가 어느 정도 이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쿠데타와 같은 군부의 돌발적인 행위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3. 김정일 정권하의 당·군관계:

당·군 융합의 持續과 變化 전망

북한 군부의 개입(military intervention)을 자극할 가능성을 지닌 몇몇 요인들을 김정일 정권과 결부시켜 분석해 본 결과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 쇠퇴’ 요소를 제외한 여타 요소들은 이제까지 견지되어 온 북한의 안정적인 당·군 융합관계 상태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정일은 승계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군대의 지속적인 지지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에 유지해 왔던 군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군의 충성을 영속화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자율성이 군벌이익주의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 대한 정치사상화 교육과 당적 통제기능을 강화하면서 군의 정치적 역할(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의 정·후보위원으로서

의 참여)은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것이 예상된다. 국가적 통일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군사적 핵심가치가 도전을 받게 될 경우 북한군은 군사율성을 해친다고 해서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사회적 소요사태로 인하여 당의 유일적 지배체제가 위협을 받게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군동원이 요구될 경우 군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정치적 참여는 유일적 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인 바,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돌출행위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군대의 정치화는 당·군 융합관계를 해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의 정치화는 유일적 당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 있어서 군을 당의 지도노선을 옹호하는 대중적 세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군내 정치사상화교육이 강화되어 온 반면 군의 정치적 세력 형성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당정치조직 기구 내의 참여 범위를 인위적으로 줄여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북한 군대의 정치화 → 군의 정치개입 범위 확대 → 군부 쿠데타 가능성 증대라는 공식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북한 군대의 정치화는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역시 ‘인간’ 즉 ‘사상’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군을 당에 융합시켜 나가

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사후 방송강좌를 통해서 김정일이 군에 대한 사상의식 강조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다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이와같은 역할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쟁의 운명도 사람의 사상의식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사상의식 고취를 중심으로 한 군의 정치화를 강화하여 군부 쿠데타와 같은 돌출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의 안정적인 당·군 융합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당지도부의 정통성과 권위의 쇠퇴 문제이다. 앞에 지적한 세 요소들은 김정일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정통성과 권위의 문제는 인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일 정권이 정통성과 권위창출을 위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더라도 기본적인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가 쇠퇴한다는 것은 당의 유일적 권력체계가 붕괴됨을 의미한다. 유일적 권력체계의 붕괴는 당·군 융합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군대는 그들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자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부터 비로소 북한 군부의 정치적 개입, 즉 군부 쿠데타의 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4. 結 論

북한 군대는 당지도권력을 위하여 사회의 광범위한 소요 사태를 무력으로 잠재울수 있는 충성적이고 효율적인 黨의 道具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폴란드나 중국의 경우처럼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군이 동원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사회적 혼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의 진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군이 당의 제도적인 권위에 도전하거나 통치권한을 거부하고 나서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 現狀維持 (status quo)를 위하여 당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군부는 김정일 중심의 당지도체계의 정통성과 권위가 결정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한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독자적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당·군 융합관계를 깨뜨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의 분열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부는 당의 제도적 권위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군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폴란드

야루젤스키 장군에 의한 軍部 쿠데타와 같은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존 정권의 顛覆을 의미하는 군부 쿠데타는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제까지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구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은 것과 같은 급격한 체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類의 북한 군부 쿠데타는 '神話'(myth)로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문제 제기	1
2. 이론적 배경	4
第 II 章 북한의 黨·軍關係 특성: 黨·軍의 융합	20
1. 북한 군대의 특성	23
2. 인민군대내 黨 및 政治機關의 조직과 기능	28
3. 체제 공고화 및 김정일 권력승계 준비 과정시 軍部の 영향력	43
4. 黨·軍 지도부의 價値(Leadership Values) 共有	63
5. 평가: 당·군 一元化體系 구축	72
第 III 章 김정일 정권하의 黨·軍關係: 당·군 융합의 持續과 變化 전망	77
1.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군부의 自律性 유지	78
2. 군사적 핵심가치 보호: 國家的 統合과 政治的 安定	85
3. 군대의 政治參與 제한	91
4. 체제의 正統性和 권위의 쇠퇴 가능성	95

5. 평 가	99
第Ⅳ章 結論: 북한 軍部の 쿠데타 가능성 및 유형 전망	103
參 考 文 獻	115

表 目 次

〈도표 1〉 연도별 제3세계 국가 쿠데타 빈도수(1946~91)	5
〈도표 2〉 북한 군대 내의 政治機構	40
〈도표 3〉 제1차 내각관료 구성(1948.9.9)	45
〈도표 4〉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의 군인의 대표율	56
〈도표 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의 군인의 대표율	57
〈도표 6〉 북한 정치국내 군부인물 구성 추이	59

第 I 章 序 論

1. 문제 제기

김일성 死後 김정일이 ‘얼굴없는 통치’를 지속해 온지도 벌써 1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서, 김정일의 統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정일이 과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의 이름하에 名目上의 통치만 하고 있는 것인가? 김정일이 名目上의 통치만을 하고 있을 경우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분분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은 김정일의 권력승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정일이 이미 오래 전부터 권력승계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의 權力基盤을 구축해 왔으며, 현재 북한에서는 그를 대신할 뚜렷한 人物이 없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그런데 김정일의 권력승계 자체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정일 자신이 그의 정권을 아버지 김일성처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김정일 政權은 對內外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실질적인 대외적 지원세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이들 변화의 여파가 북한의 체제변화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졌다. 對內的으로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침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諸問題들이 새로 출범한 김정일 政權을 압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김정일 정권의 장래에 대한 회의론이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론을 수용할 경우 자연히 북한의 政治的 變動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북한의 政治的 變動을 주도하는 주요 行爲者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 여러 학자들이나 언론들이 북한의 정치적 변동에 대한 주요 행위자로 가장 비중있게 지적해 온 것이 바로 軍部이다. 김정일 정권이 군부 쿠데타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기택 교수는 최근 한 논문에서 “(김정일 정권하) 북한은 필수적으로 김일성의 체제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전환점에 이른 것이다. 체제적인 모순을 해결할 북한의 정치세력은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분리되는 군부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구소련 등이 경험한 급진적인 體制 變化時 군부가 쿠데타와 같은 행위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가 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루마니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민 주도의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운동에 가세했을 따름이다. 구소련의 군부는 ‘체제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반대하는 보수파 쿠데타 시도에 일부 가담한 것이외에 지금까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군부는 改革·開放政策에서 胚胎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혼란을 억제하는 주요 담보세력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사실상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구소련에 있어서 급진적인 체제변화를 겪었던 과정에서 軍部の 介入(military intervention)¹⁾을 부추기게 될 충분한 動機(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정 및 취약한 정치 및 경제적 제도)²⁾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黨(民)·軍關係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부가 체제변화를 주도하는 제1의 세력이 될 수 있다는 假說은 상당히 설

1) 여기서 지칭하는 軍部の 介入은 ① 북한군 다수 또는 일부의 급진세력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자처하는 일단의 군부지도자가 기존 정권에 도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쿠데타, ② 광범위한 군부 지도자들과 함께 급진주의 정치가들이 실행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2)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p. 192~263.

득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북한의 군부는 과연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군부는 체제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지닌 김정일 정권하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가? 본 연구는 ① 북한의 黨·軍關係의 특성, ② 김정일 정권하의 黨·軍關係의 持續과 變化, ③ 북한 군부의 쿠데타 可能性과 그 類型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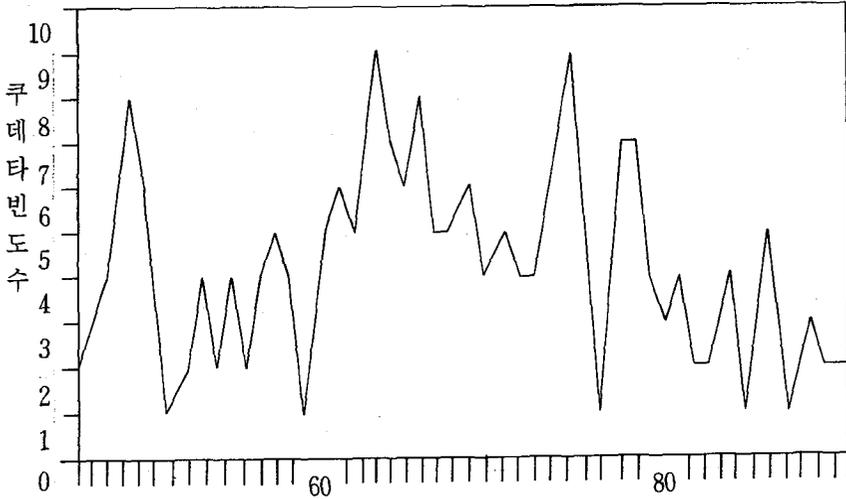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가. 헌팅톤의 民·軍關係 모델:

주체적 통제 및 객체적 통제

2차세계 대전 이후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특징적인 정치·사회적 상황은 군부의 政治的 介入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문민통치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政治的 軍事主義(political militarism)가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변화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향으로 대두하였다. 예를 들면,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은 주로 독립 후 제도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군사 쿠데타를 집중적으로 경험하였다(<도표 1> 참조).

〈도표 1〉 연도별 제3세계 국가 쿠데타 빈도수(1946~91)



출처 : 이문조·손기웅·배진수, “민·군관계의 역사적 유형과 민·군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제2집 (1994), p. 260.

그러나 같은 시기에 공산주의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도 성공적인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조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 위한 서구 학자들의 학문적 노력의 산물은 많이 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실패 및 군의 정치적 개입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³⁾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軍에 대한 文民統制 모델’에 기

3) 이러한 연구의 일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enry Biencn, ed., *The Military Intervences: Case Studies in Political Develop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William H. Brill,

초한 民·軍關係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군부에 대한 文民統制를 확실히 할 수 있

Military Intervention in Bolivia: The Overthrow of Paz Estenssoro and the MNR (Washington, D.C.: Institute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Systems, 1967); Thomas S. Cox, *Civil-Military Relations in Sierra Leone: A Case Study of African Soldiers in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Samuel Decalo, *Coups and Army Rule in Africa: Studies in Military Sty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Egon Fossum,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Military Coups d'Etat in Latin America," *Journal of Peace Research*, IV, No. 3 (1967); Richard Higgott and Finn Fuglestad, "The 1974 Coup d'Etat in Niger: Towards an Explanation,"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XIII (September 1975); Morris Janowitz and Jacques van Doorn, eds., *On Military Intervention* (Rotterdam: Rotterdam University Press, 1971); C. I. Eugene Kim, "The South Korean Military Coup of May 1961: Its Causes and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Its Leaders," in Jacques van Doorn, ed., *Armed Forces and Society: Sociological Essays* (The Hague: Mouton, 1968); Se-Jin Kim, *The Politics of Military Revolution in Kore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1); Michael F. Lofchie, "The Uganda Coup: Class Action by the Military,"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X (March 1972); Robin Luckham, *The Nigerian Military: A Sociological Analysis of Authority and Revol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Martin C. Needler, "Political Development and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0 (September 1966); José Nun, "The Middle-Class Military Coup," in Claudio Veliz, ed., *The Politics of Conform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Robert

는 방법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主體的’(subjective) 통제모델과 ‘客體的’(objective) 통제모델이 그것이다.⁴⁾ 주체적 통제모델에 의하면 문민 지도자는 군내부에 직접적인 통제 메카니즘을 설치하여 군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군을 통제하고자 하는 문민 지도자들의 요구와 군 자체의 전문직업주의적 요구 사이에는 원초적인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에 기초한 진급(merit-based promotion)이나 군 자율성(military autonomy)을 허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민 지도자는 인위적인 통제기구를 통하여 군에 대한 정치적 교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군의 전문직업주의화를 약화시키면서 군의 모든 부문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주체적 통제는 ‘직접적’ 또는 ‘적극적’ 통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민 지도자에

D. Putnam, "Toward Explaining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n Politics," *World Politics*, XX (October 1967); Mauricio Solaun and Michael A. Quinn, *Sinners and Heretics: The Politic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5); William R. Thompson, *The Grievances of Coup-Makers* (Beverly Hills, Calif.: Sage, 1973); Claude E. Welch, Jr., ed., *Soldier and State in Africa*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4)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p. 80~85.

의한 군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부와 비교하여 민간그룹의 세력이 최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그룹이 군대를 그들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력 또는 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주체적 통제의 要諦이다. 바로 이를 위해서 민간 지도자가 군통제를 위한 기구들을 설치하여 군체계의 모든 부문에 개입하여 군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⁵⁾

반면 객체적 통제모델에 있어서는 군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군전문직업주의와 군전문업무 -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 - 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군이 정치적으로 중립화된다는 것이다.⁶⁾ 따라서 객체적 통제모델은 군을 전문직업주의화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화함으로써 군부의 정치적 세력을 약화시켜 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때, 객체적 통제는 ‘간접적’ 또는 ‘비적극적’ 통제로 이해될 수 있다. 헌팅톤의 이러한 민·군관계 모델은 서구 자유주의 국가의 민·군관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틀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당·군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기본개념을 제공하는데 공헌한

5) Ibid., p. 84.

6) Ibid., pp. 80~85; Eric Nordlinger,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pp. 12~19.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콜코비츠의 葛藤모델과 콜튼의 參與모델

1) 콜코비츠의 葛藤모델

콜코비츠(Roman Kolkowicz)의 葛藤모델(institutional conflict model)은 헌팅톤의 주체적 통제모델에 기초하여 공산주의 국가들의 당·군관계를 규명한 대표적 연구모델이다. 콜코비츠에 의하면, 소련 정치에 있어서 두 개의 주요 행위자가 있는데, 그것은 곧 서로 다른 성향, 목표 그리고 사회적 정향을 소유한 공산당과 군부라는 사실이다. 이들 공산당과 군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견해와 이익에서부터 연유하는 만성적이고 적대적인 갈등에 참여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⁷⁾ 콜

7) 공산주의 국가들의 민·군은 근본적으로 갈등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당에 의한 군통제를 통하여 정치·사회적 안정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Herbert Goldhamer, *The Soviet Soldier* (New York: Crane, Russak, 1977); Raymond L. Garthoff, *Soviet Military Policy* (New York: Praeger, 1966); Thomas W. Wolfe, "The Military," in Allen Kassof, ed., *Prospects for Soviet Society* (New York: Praeger, 1970) pp. 112~42; Thomas W. Wolfe, "Political Primacy vs. Professional

코비츠는 소련의 “당·군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성향인 바, 이는 자연히 소련의 정치적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련공산당은 평등주의, 국제주의, 만장일치주의 및 군부의 당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복종을 선호해 온 반면, 군부는 엘리트 중심주의 및 민족주의적 성향이 농후하고 직업상의 자율성과 사회로부터의 초연한 자세를 추구하며, 영웅적 상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⁸⁾ 더 나아가 콜코비츠는 군이 그들의 전문직업주의적 독립성을 뛰어 넘어서는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소련 정치 체계에는 권력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백에 편성하여 소련 군부가 정치적 비중을 증대시키고자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⁹⁾ 따라서 당의 지

Elan,” *Problems of Communism*, 13 (May-June 1964), pp. 44~52;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Zbigniew Brzezinski, *Political Controls in the Soviet Army* (Ann Arbor, Mich.: Edwards Brothers, Inc., 1954); John Gittings, *The Role of the Chinese Ar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Ellis Joffe, *Party and Ar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er Corps, 1949-1964*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George C. Malcher, *Poland's Politicized Army: Communists in Uniform* (New York: Praeger, 1984).

8)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p. 11~35.

9) 소련 군대는 이러한 정치적 통제에 불구하고 브레즈

배·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련공산당은 특별통제 기구인 군대내 政治行政機構(MPA: Main Political Administration)를 통해서 군부에 대한 통제권위를 보유하고자 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소련의 MPA는 군에 대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민·군관계가 당·군관계의 이분법으로 개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유일한 통제기구로 인식되어 온 정치조직을 통해서 문민 당엘리트들에 의해서 통제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당에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 군정치위원은 군대 내부의 최상급 단위에서 말단 중·소대 단위에까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체계는 분리되고 군지휘계통 역시 이원화되어 있다. 군지휘관의 권위는 군정치위원의 간섭과 통제로 인하여 감소된다. 군정치위원들은 군에 대한 정치교육과 감시를 실시하며 중요 군사결정에 있어서 부서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군지휘관들의 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확인하는 민간 엘리트의 감시인으로 복무한다.

네프 시대에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Roman Kolkowicz, "The Political Role of the Soviet Military," in Joseph L. Noguee, ed., *Soviet Politics: Russia after Breznev* (New York: Praeger, 1984), pp. 74~83.

요약하면, 군정치위원은 민간 엘리트의 정치적 이상과 민간요원을 군부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군정치조직을 가진 군대는 민주주의 사회의 군대에 비해서 군전문직업주의가 상당히 박탈된 군대라는 것이다. 당의 정치적 통제능력은 군전문직업주의에 反하는 것이며, 정치적 통제자로서 군정치위원은 당을 위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한다. 반면 군전문직업주의자로서 군지휘관은 보다 많은 전문직업주의적 자율성을 쟁취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정치위원과 군지휘관이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순된 역할을 고려하여, 이들은 상호 갈등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군내부에 정치위원의 역할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증폭시킬 때, 군의 강한 반발과 함께 군사 쿠데타로까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고려해 볼 때 공산주의 국가들 중 최소한 몇 개국은 당에 의한 군부의 불완전한 통제기술로 말미암아 군부 쿠데타를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군사 쿠데타를 경험한 공산주의 국가를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당에 의한 군의 인위적 통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콜코비츠의 갈등모델 자체의 취약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국가들의 당·군관계를 이해하는데 갈등모델이 갖는 취약성은 무엇인가? 갈등모델은 유일 레닌주

의 정당에 의해서 정치권력이 독점되고 있는 레닌주의적 정당국가의 일반적인 정치구조를 간과해 버린 경향이 있다. 쉽게 정의를 내리자면, 당은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체계를 구성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 군대 및 이외의 직업그룹들과 같은 사회적 주요 정치집단들은 당구조 내로 조직되고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그룹들은 당중앙위원회 및 당정치국 등의 정책결정 기구 내의 주요 대표자가 된다. 따라서 군사 엘리트들 역시 당 엘리트가 되며, 동시에 그들은 이중 역할을 갖는 엘리트들이자이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군장교 대부분은 당원이라는 사실이 이와 같은 점을 잘 반영해 준다. 따라서 ‘당·군관계’를 이분법적 차원에서 갈등관계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당과 군의 제도적 관계는 ‘전체’ 중의 하나며 그 ‘부분’이다. 한 제도로서의 군은 전체 당구조상의 한 부분이며 그 국가의 일 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게 될 경우, 민·군간의 갈등을 두 개의 특수한 제도 내에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룹 사이의 경쟁으로서 인식해버릴 수 있는 혼란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당·군관계’라는 것은 당내의 민·군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당이 더 이상 그 국가의 한 구조가 아니고 그 黨·國家(Party-State) 역시 고유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민·군 엘리트들 간의 갈등은 일

차적으로 내부 당 엘리트간의 갈등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당·군관계는 상호 갈등을 지닌 이원적 관계라기 보다 전체(당) 속의 부분(군대)이라는 측면에서 융합적 관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2) 콜튼의 參與모델

콜튼(Timothy Colton)의 參與모델(participation model)은 기본적으로 헌팅톤의 객체적 모델시각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당·군관계를 설명하고 있다.¹⁰⁾ 콜튼은 콜코비츠와 같이 당·군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서 그들의 관계를 서로 적대적인 이분법적 관계로 보지는 않는다. 콜튼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군대는 당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10)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콜튼의 참여모델은 헌팅톤의 객체적 통제 모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객체적 통제모델은 서방국가들의 군직업전문주의를 통한 군의 엄격한 중립 즉 정치적 불참여를 전제하고 있는데 반해, 콜튼의 참여모델은 군부지도자들이 정치체제 내에서 자신들에게 권력배분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치·군사문제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콜튼의 참여모델이나 헌팅톤의 객체적 통제모델은 다같이 군과 민 또는 군과 당의 관계를 서로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 않고 상호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조화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당과 군대를 이분법적인 범주에 넣고 공산주의 국가의 당·군관계를 갈등관계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콜튼은 소련 군대가 전체에 해당하는 당의 한 부분으로서 실질적인 자율성을 소유해 왔다고 설명하였다.¹¹⁾ 그에 의하면 당의 민간 지배엘리트들은 소련 군대의 고유영역에 대한 권위를 용인해 줌으로써 군의 전문직업주의적 자율성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으로 군지도자는 비군사 영역의 민간 자율성을 인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군의 영향력이 군 고유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에 대해서는 민간인 정책결정자들이 지배해 왔다는 사실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콜튼은 한편으로는 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및 당 구조간에 공통된 이익과 유대를 공유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군의 당조직 기관인 정치위원회체가 감시자가 아니라 오히려 군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많은 공통된 이익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은 군대로 하여금 그 고유의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

11) 이러한 모델은 콜튼의 다음과 같은 연구에 잘 분석되어 있다. Timothy Colton, *Commissars, and Civilian Autho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Soviet Union: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1 (Autumn 1978).

로써 군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켜 왔다. 당은 군대로 하여금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시키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거나, 일반적으로 군대가 필요로 하는 내외부적인 목표를 수용함으로써 군대를 만족시켜온 것이다. 콜튼은 각각의 분명한 형태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당·군의 영역의 개념을 제시하고 소련의 군사정치에서 이들 영역을 넘어서는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모델하에서도 군이 국내정치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튼은 군의 정치관여 및 개입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행로를 지적하였다. 첫째, 군은 국내정치 관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중국적으로 정치과정에 직접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이 가능토록 할 수 있다. 둘째, 군이 그들 고유의 핵심이익 혹은 가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고도 직접적인 정치개입을 할 수도 있다.¹²⁾

그러나 참여모델은 군이 그러한 행위를 자제해 온 이유가 그것이 군전문직업주의 및 군의 자율성에 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직까지 성공적인 군부 쿠데타를 경험하지 않은 이유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공

12) Colton, *Commissars, and Civilian Authority*, pp. 233~49.

산주의 국가들의 군대는 당의 군대 또는 당을 위한 군대라는 의미에서 볼 때 군대는 당에 대하여 복종적이며 수동적이다. 따라서 군대는 당의 부분으로서 자율성과 고유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전체(당)를 위한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전체에 해당하는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군의 돌발적 행위의 필요성은 그만큼 반감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이론적 적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군부역할은 주로 두 가지 모델에 의해서 분석되어 왔다. 콜코비츠의 葛藤모델과 콜튼의 參與모델이 그것이다. 갈등모델은 형식적인 통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비해, 참여모델은 비형식적인 통제체계와 군과 정치권 전체(당)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의 당·군관계 규명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시도는 주로 구소련(부분적으로는 중국) 특히 브레즈네프 시대의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제약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국가에 있어서는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전염병처럼 확산되었던 군부 쿠데타와는 무관하게 북한군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대가 비교적

군 자체의 임무에 머물러 온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후자의 참여모델이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변화를 겪는 과정에 있어서나 군부의 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참여모델이 유효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당·군관계에 있어서 당에 의한 군통제를 강조하는 갈등모델적 특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군대 내에 배치된 정치 및 당조직은 엄밀히 말해서 葛藤모델이 설명하는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실제로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역할 또한 군 내부의 조직위계상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하급장교로 내려가면 갈수록 정치위원체계는 당에 의한 군통제라는 부정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당·군관계는 시기에 따라 달리 발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체제공고화(consolidation) 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당·군관계가 당에 의한 군부의 철저한 통제를 강조하는 갈등모델적 속성이 두드러진데 반해, 1970년대 이후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유지(system maintenance)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참여모델적 속성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

하고자 한다. 북한에 있어서 여타 제3세계 국가와는 달리 성공적인 군부 쿠데타에 의한 정치변동을 겪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함으로써 북한체제 변화 가능성과 군부의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인가?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을 의미하는 군부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있는가? 군부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第 II 章 북한의 黨·軍關係 특성: 黨·軍의 융합

북한 당국은 공화국건설 초창기부터 당을 강화하고 당중심으로 북한의 諸 사회단체를 결속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모든 당원들이 당규율을 의무적으로 동일하게 준수하며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전체 당조직은 당중앙에 복종하고 당의 결정을 무조건 집행”¹³⁾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회 각계 각층 인민들을 유도해 왔다.

북한은 그들의 기본 정치노선으로 “무엇 보다 먼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을 기본정치과업으로 하고 4대 당면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4대 당면과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각 정당과 각파들을 망라하는 민주주의적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집결하여 우리 민족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립하기에 노력할 것.

② 민주주의적 건국사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인 일본제국

13)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258.

주의의 잔제세력과 국제반동의 주구들 기타 모든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순조롭게 할 것.

③ 통일적인 전조선민주주의리즘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 각지방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며 일제가 파괴한 공장, 기업소들과 전체 인민경제를 복구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의 기본 토대를 닦을 것.

④ 이와 같은 모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을 더욱 확대 강화하며 각계 각층의 군중을 조직하며 그들을 당주위에 결속시키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킬 것”¹⁴⁾

북한의 당조직 강화 노선은 그들의 군대사회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¹⁵⁾을 설명하면서 인민군대내 당조직 노선을 분명히 했다. 김일성은 “우리의 단결은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단결이며

14)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1」(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p. 211.

15)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12」(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p. 179.

당을 옹호하기 위한 단결입니다. 만일 그 누가 자기 주위에 사람들을 그러모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위원회들은 모든 간부들과 군인들이 당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당중앙위원회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고 하면서 “당이 없이는 어떤 혁명과업도 수행할 수 없으며 당은 뇌수인 당중앙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인민군대의 모든 군인들과 간부들을 당중앙위원회 두리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그들이 당중앙에 최대의 충성을 다하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에 있어서의 당·군관계는 당과 군을 분리하여 보는 당·군 이원화체계가 아니라 군이 당의 한 부분으로서 직접적으로 당정치조직에 참가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하는 당·군의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黨·軍 一元化 즉 黨·軍 융합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군은 당에 대해서 독립된 조직체라기보다 당의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군대라는 한 하부조직이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혁명투쟁을 조직하고 령도하는 조선로동계급의 사령부이며 참모부”¹⁶⁾인 조선노동당의 指導에서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지지 강화하는 데 일익을 담

16)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48.

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반 노력을 강구해 왔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1. 북한 군대의 특성¹⁷⁾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당규약 서문) 하며, 북한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7장 46조)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군대는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군대이다. 나아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당규약 서문)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북한군은 黨의 軍隊를 초월하여 김일성 수령 개인의 군대, 즉 김일성 私兵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그 창건도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실현되고 그 강화 발전도 수령의 령도밑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모든 승리와 영광도 수령의 품속에서 마련”¹⁸⁾ 되었다는 것이다. 무장유격대

17) 여기에서 논의한 북한 군대의 특성은 다음의 연구의 내용을 수정·정리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鄭永泰,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p. 6~14.

18) 「로동신문」, 1991.12.28.

의 후계자는 북한 인민군이며, 김일성은 무장유격대의 지도자임과 동시에 이를 발전시켜 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 자신의 군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에게 충심으로 복종하고 수령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洗腦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군대는 김일성 정권의 ‘남조선 혁명’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革命武裝力으로서, 당의 수위 및 수령으로 통칭되는 김일성의 정권 강화수단으로서도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을 통한 敎示¹⁹⁾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이 군대가 과거 일제의 가혹한 탄압 밑에서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항일 무장투쟁에 모든 것을 바쳐온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었다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인민군대가 북한의 정규군대로서 창건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력사적 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 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런 군대”임을 밝혔다. 북한 당국에 의하면 인민군의 이러한 革命傳統은 조선의 모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고 민족의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인민의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

1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1」, pp. 189~90.

해서는 반동분자와 착취계급의 역할 및 제국주의의 도발을 혁명적 무력으로서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역할은 혁명과업의 성취를 무력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조선의 모든 혁명을 성취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인민군은 당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武力手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인민군에 혁명전통교양 학습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인민군대는 首領·黨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인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 해방이라는 것은 무력에 의해 한반도 적화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김일성의 정권확장의 야망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김일성은 민족해방투쟁을 政權爭取의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히고 있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 모든 투쟁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조직적인 폭력투쟁, 무력투쟁, 민족해방투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

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도 김일성의 한반도 全域으로의 정권 확장을 위한 무력적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그의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기구로서 인민군을 강화·발전시켜 왔다. 북한은 군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 과업으로 군의 조직·사상적 강화, 군사기술의 과학화, 현대화 및 군의 대집단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는 1960년대 말부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및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군사노선으로 집약되었다. 북한은 金父子와 당에 충실한 자들을 군대의 골간으로 하여 군을 育成·強化해 온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인민군대로 하여금 당과 지도자 즉 수령에 대한 충성 및 절대적 복종, 자발적 희생정신, 혁명적 동포애와 계급투쟁의식 등을 부추켜 왔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인민군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威信과 地位를 부여해 왔다. 김일성은 인민군대를 가리켜 ‘공산주의 학교’²⁰⁾라고 까지 말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사회적 위신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 개인을 위한 私兵과도 같은 존재로서 그 역할은 수령에 대해 종속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측면을 지닌 특수집단으로 인식된다. 북한 인민군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이고 김일성주의(주

2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14」, pp. 265~302.

체사상)의 보호자이며,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무력집단으로서 김일성 정권의 기반을 강화해 주고 있는 核心要素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철저한 성분조사를 통하여 아주 선택적으로 군대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인민군은 스스로 당과 김일성의 혁명과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며 사상적으로 인정을 받은 집단이라는 우월감을 가짐으로써 당과 수령에게 최대한의 충성을 바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김일성은 그 자신에게 인민군의 절대적인 충성을 유도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군대 내부에 정치 및 당조직 기구를 설치하여 군의 자율성과 전문직업주의를 기반으로 黨事業에 대한 군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군을 당에 융합시키는 소위 ‘黨·軍 一元化體系²¹⁾’를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21) 이제까지 북한의 당·군관계를 논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당과 군의 관계를 민·군관계 개념에 입각하여 이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당에 의한 군통제체제를 ‘당·군 이원화 체제’로 특징짓고 있다. 이성규, “북괴 당군제도 - 2원화지휘체제는 취약요소인가,” 「국방연구」, 제26권 제2호 (1983), pp. 221~40. 윤병익, “북한에 있어서의 민·군관계,” 「國防論集」, 제12호 (1990 겨울), pp. 47~65. 그러나 북한의 당과 군은 ‘全體’와 ‘部分’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 북한의 黨·軍關係를 ‘黨·軍 一元化體系’ 또는 ‘융합체계’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인민군대내 黨 및 政治機關의 조직과 기능

북한 인민군대 내에 당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이 개시된 이후부터이다. 그 전에는 군관학교 및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 당단체가 인민군대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인민군대 내에서는 단지 문화부가 군인들에 대한 문화교양 사업과 당원들과의 사업을 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6.25전쟁 동안에 군대에 정치위원들을 파견하여 북한 군대에 대한 당의 領導와 政治教養 사업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²²⁾

김일성은 1950년 10월 21일 “인민군대내에 조선노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라는 題下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에서 “지금 군대내에서는 결함에 대한 비판사업이 잘 전개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결함이 제 때에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이 군대 내의 당단체의 결핍에 있음을 지적하였다.²³⁾ 동시에 그는 “인민군대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건된

22) 이에 대해서 김일성은 1950년 10월 21일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 145.

23) 위의 책.

혁명무장력으로서 (조선로동당)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할 사명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인민군대는 오직 조선로동당에 의해서만 령도되어야 하며 인민군대내에는 (조선로동당) 당 조직외에 그 어떤 다른 당조직도 있을 수”²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들의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책의 일환으로 군대 내에 ‘당단체’와 ‘정치기관’을 조직하게 되었다. 북한은 먼저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각급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고 부대와 구분대들에 정치부부대장, 구분대장 직제를 신설했다. 중대에는 당세포, 대대에는 대대 당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당단체들에 대한 지도는 정치기관에서 획일적으로 하도록 하였다.²⁵⁾

북한은 이같은 당단체와 정치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의 유일당의 노선과 정책, 결정, 지시를 군인들에게 제때에 정확히 해설침투시킴으로써 군인들이 당이 요구하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북한 당국은 이들 당단체들에 대하여 모든 당원들을 빠짐없이 당회의에 참가시키며 절대로 당내에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

24) 위의 책, p. 148.

25) 위의 책.

들은 직위가 높다고 하여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단체들이 투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북한이 당단체와 정치기관을 조직하여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게 된 것은 군대 내의 ‘군벌주의적 행동’과 ‘부화한 현상’에 대해서 사전에 썩기를 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김일성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솔직히 피력하고 있다.

“당원 가운데는 높고낮은 당원이 없습니다. 사령관도 전사도 다 같은 당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별만 달면 천하 제일 인듯이 생각하면서 왕왕 로동당원답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일부 군관들의 군벌주의적 행동과 부화한 현상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해야 하겠습니까. 당생활이 건전하지 못한 군관들은 군벌주의를 쓰고 음주방탕하며 병사들을 망탕 부려먹습니다. 만일 그들이 봉건주의, 자본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²⁶⁾

따라서 김일성은 군대 내의 ‘군벌주의’와 ‘부화한 현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원들이 당중앙이 요구하는 대로 일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적 규율을 엄수하고 당원의 의무를 어김없이 실천해 주기를 역설해 왔던 것이다.

26) 위의 책, p. 355.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몇 달부터 스탈린의 우상숭배가 흐루시초프에 의해 격하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인숭배 비판운동의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조짐이 짙어지자 김일성은 이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군부를 비롯한 제반 사회단체들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1956년 8월 30~31일에 개최된 당중앙전원회의에서 연안파가 선봉이 되고 소련파가 가세한 반김일성 캠페인이 전개(소위 8월 종파사건으로 통칭됨)되었는데, 同 캠페인은 경제정책(중공업제일주의, 경공업 경시, 노동자 저임금 등) 및 김일성 개인숭배 비판 등에 초점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성은 同 캠페인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박창욱, 최창익 그리고 ‘반김연합전선 동지’들을 반당, 종파분자로 몰아 당에서 축출·처단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⁷⁾

동시에 김일성은 군대 내에서의 반당, 종파분자의 준동을 우려하여 이의 차단을 위한 당조직을 개선·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3월 8일 김일성의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이라는 題下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에는 북한 군대내 당조직의 개선·강화내용이 명확히 피력되어 있다. 同 결론에서 김일성은 “적들은 반당분자들과 정치적으로 견실치 못한 자들을 통

27) 김갑철, “북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논문, 1976), pp. 92~93.

하여 우리 당내에 반혁명적인 사상을 퍼뜨렸”으며, “당대표 자회의에서 비판된 바와 같이 반당분자들은 수정주의를 밀 수입해다가 그 독소를 우리 나라에 적지않게 뿌려놓았”다고 하면서 “수정주의의 사상적 영향은 일부 근로자들과 인텔리들에게 미치었으며 그것은 군대에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 결과, “반당분자들이 인민군대내에도 수정주의의 사상적 독소를 적지 않게 뿌려놓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밝혔다.²⁸⁾ 따라서 그는 군대 내의 “반당분자들이 뿌려놓은 수정주의 독소”를 뿌리뽑기 위하여 군대내 당정치 사업을 개선·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김일성은 먼저 인민군대내 정치기관들과 당조직들의 결합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민군대의 당사업은 “정치부의 유일한 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결합이 파생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정치부가 웃기관에만 매여있고 집체적 지도와 통제 밑에 있지”않기 때문에 당정치 사업의 계획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이 우려한 것은 당정치 사업의 계획과

28)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12」, pp. 159~60.

집행의 효율성 문제 보다는 군총정치국의 지휘하에 군대의 당조직이 획일적으로 통제됨으로써 군정치부의 파벌주의가 전체 당조직을 혼란 또는 붕괴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은 총정치국장인 “최종학을 비롯하여 총정치국내 일부 일군들이 사상적 동요를 일으켰”²⁹⁾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은 1960년 9월 8일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題下의 연설에서 “반당혁명분자들은 인민군대를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령도로부터 떼여내려고 기도하였으며 당과 군대를 분리시켜 자기의 음흉한 목적을 실현해 보려고 하였”다고 지적하고, “종파분자들은 불순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총정치국장이었던 “최종학은 의식적으로 당의 로선을 반대하였습니다. 당은 정전 직후에 벌써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그는 당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³⁰⁾ 김일성이 주장한 바대로 총정치국장인 최종학이나 정치부 내의 인물들이 종파분자적 행위를 실제로 하였기 때문에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떠나서 김일성이 군정치부에 의한 군당조직의 획일적 지도관계의 위협성을 인식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29) 위의 책, p. 163.

3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14」, pp. 345~50.

둘째, 이제까지 인민군대내 초급당조직만 있었기 때문에
 군관당원들을 당조직 생활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단
 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당조직체계의 결핍이다.³¹⁾

물론 군관당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은 초급당단체에서 조
 직생활을 할 의무가 있으나 특히 군관당원들은 여러 가지 핑
 계로 초급당회의를 회피함으로써 당조직 생활을 기피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치기관들에 의한 군
 관들의 지도 및 통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김일성은 이와 같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조직 자체의
 개선과 강화책을 내놓았다. 이의 일환으로 그는 당위원회제
 도를 인민군의 모든 계층에 조직할 것을 명령하였다. 인민군
 의 최정점에는 인민군당위원회를, 군단과 사단, 연대에는 당
 위원회를 그리고 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를 두고 중대에는 초
 급당단체들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인민군당위원회은 집단군
 이나 군단인원, 총정치국 인원, 정치일군 및 군사간부들이 총
 체적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연대당위원회에는 연대장과 정
 치부연대장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당위원회 책임자는 당년한
 과 수준에 따라 정치부장 또는 부대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
 다.³²⁾

31)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12」, p. 165.

32) 위의 책, pp. 166~67.

당위원회의 기능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치기관들의 사업지도와 정치 및 군지휘 간부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의 강화가 그것이다.³³⁾ 기존에는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정치국장이 독단적으로 군내의 정치사업을 운영해 오며 따라 총정치국의 전횡이 우려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군관과 정치일군을 포함한 모든 당원들이 함께 참가하게 되는 당위원회가 당중앙위결정을 집체적으로 집행대책을 토론·결정하도록 하였다. 반면 총정치국은 인민군당위원회의 집행대책에 대한 토론·결정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총정치국은 인민군당위원회의 사업부서에 불과한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총정치국장이 혼자머리로 생각하고 독판치던 것을 이제부터는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론하여 대책을 세우게 되며 아래 단위의 사업도 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감독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민군당위원회에서 총정치국의 사업을 비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군당위원회는 총정치국을 감독하는 또다른 기관으로 되었다. 군단, 사단, 연대당위원회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⁴⁾

인민군대내 당위원회들의 또 다른 기능으로 간부들의 당

33) 위의 책, p. 167.

34) 위의 책.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의 강화가 지적된다. 군대당위원회에 군사간부와 정치간부가 망라하여 참여하여 여기에서 간부문제, 간부들의 당생활에 대한 문제, 전투정치훈련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 제반문제를 집체적으로 토론·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군사간부들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지난날 집단정치부장들은 집단군정치부의 통제를 받았는데 집단군에 한달에 한두번 올라가나마나 하였기 때문에 집단군에서는 그들이 사업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 수 없었”다고 시인하고 이들에 대한 당적 통제의 강화를 정치부장이나 집단장이 참여하는 집단당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⁵⁾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 군대에서 정치적 차원의 최고조직이 당위원회라 할 수 있다. 사단에는 사단 당위원회가 최고조직이며, 군단에서는 군단당위원회가 최고조직이다. 이와 같이 군대 내에서 당위원회의를 설치하여 군대내 최고의 지위로 격상시켜 놓은 것은 어느 개인에 의한 조직을 지도한다는 원칙을 거부하고 조직이 개인을 지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군개인에 의한 파벌조성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5) 위의 책, p. 168.

실제로 김일성은 1960년 9월 8일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집단에 의한 개인의 통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단장의 사단이나 군단장의 군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 처음에는 당위원회가 나와서 몹시 시끄럽게 군다느니, 당위원회가 지휘관을 타고 앉으려 한다느니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타고 앉아도 일없습니다. 어느 개인이 조직을 타고 앉는 것이 나쁘지 조직이 개인을 타고 앉는거야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매개인이 당조직의 지도,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의 집체적 지도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³⁶⁾

이와 같은 군대내 당정치사업의 개선·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9년 2월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 개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대내 당위원회의 사업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일성에 의하면 아직까지 “군대안의 정치일군들이 당정치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애지 못한데로부터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군인대중 속에 심화시키지” 못하였으며, “당원들의 당생활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한다.³⁷⁾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 인민군 당 제4기 4차회의에서 오

36)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14」, pp. 351~52.

37)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60.

진우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허봉학 외 약 10여 명의 고위 장성들의 숙청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숙청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김창봉을 비롯한 장성들이 군부내 도당을 형성하려 했고 군병력을 마치 사병처럼 다루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³⁸⁾ 이후부터 북한 군대 내의 당정치사업이 한층 더 개선·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온 북한 인민군 내의 당 및 정치기관의 조직과 기능은 1980년 10월 13일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 집약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黨規約에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정점으로 하는 당중앙위 직속 당조직과 정치기관을 군대의 각급 단위에 구성·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 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당규약 제4장 33조) 하며, “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하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당규약 제7장 47조)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군내 인민군 당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당조직(군단 당위원회, 사단 당위원회, 연대 당위원회, 대대 초급당위원회,

38) 서대숙,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 2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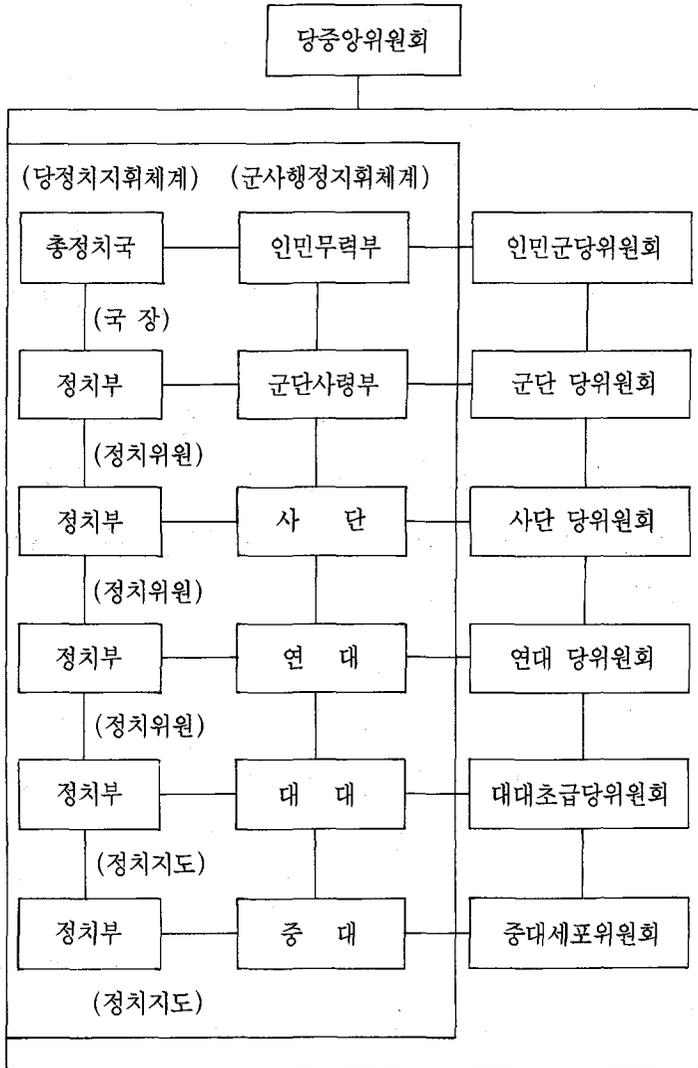
중대세포 당위원회 등)은 다음과 같은 주요 機能을 수행한다.

- ① 전군의 주체사상으로의 교양
- ② 군대내 당의 유일사상체계 공고히 확립
- ③ 간부대열 강화, 간부후비대 육성, 이들의 당성을 끊임 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 조직, 지도 및 당대열의 확대 및 강화
- ④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 강화 및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한 당무리에로의 결속
- ⑤ 인민군내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히도록 지도
- ⑥ 당군사노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 강화

그런데 인민군대 내의 각급 당위원회들은 해당 軍單位 정치지휘체계 부문의 책임자와 군사지휘체계 부문의 책임자로 구성되는 해당 단위의 최고 지도기관이다(〈도표 2〉 참조).

군대내 정치기관은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당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組織되어 있는데(당규약 제8장 51조) 인

〈도표 2〉 북한 군대 내의 政治機構



출처 :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 鄭永泰,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서울 : 民族統一研究院, 1994), p. 20.

민무력부 총정치국, 군단·사단·연대·대대·중대정치부가 그것이다. 인민군 총정치국을 비롯한 이들 정치기관은 인민군들에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組織·수행하며 軍內 해당 당위원회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당규약 제8장 51조).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직속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당규약 제8장 52조).

이러한 인민군내 당 및 정치기관은 군사지휘체통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직속의 別個 指揮系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군지휘관의 명령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 군대내 정치기관 조직의 비준과 서명을 필요로 한다. 정치위원은 군지휘관이 당정책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저지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군대내 정치기관은 군지휘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권한을 행사하면서, 金父子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민군을 통제·유도해 나가는 임무를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군대 당위원회에는 대부분 당원인 정치부문 군관들과 군사지휘 체통의 군관들을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상호 비판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업을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케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게 되는 정치부문 일꾼들의 업무상 전횡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즉 북한 당국은 군대당위

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부문 군관들이 당의 노선을 이탈하거나 파벌조성과 같은 부정적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있어서 당에 의한 군통제를 보강하기 위한 또 다른 통제가 바로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라는 청년조직에 의한 것이다. 군내의 사로청 조직은 군내의 非黨員을 당의 지도 밑에 구속하기 위한 조직이며 모든 군인의 일상생활을 열성당원의 행동으로 강화발전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은 군내 당조직체계의 하나인 각급 사로청조직을 지도·통제하고 있다.

이상에서 북한의 당·군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초기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는 콜코비츠의 갈등이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군대를 정권에 위협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군대 내에 정치조직이라는 특수기관을 두어 군대에 대한 획일적 통제노력만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치조직에 의한 이러한 획일적 통제는 정치조직 자체의 돌출행위의 위험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군지휘계통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군당위원회라는 새로운 당조직을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 정치부 군관뿐만 아니라 군지휘군관을 동시에 참여시켜 당의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상호 비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정치부 일꾼이나 군지

회 계통의 일꾼 누구를 막론하고 당조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이들 개개인들은 당조직을 위하여 충실히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부 일꾼이나 군지휘부 일꾼 모두가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당조직(군당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당의 목표관철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인민군대 내의 당조직은 군대의 당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통제’와 ‘협력’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인민군대내 당조직은 군을 통제하기 위한 단순한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군의 당적 활동을 고양시키기 위한 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의 당·군관계가 콜코비츠의 갈등모델과 콜튼의 참여모델적 특성을 다함께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3. 체제 공고화 및 김정일 권력승계 준비 과정시

軍部の 영향력

콜코비츠의 갈등모델에 의하면 권력승계 시기에 군부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문민 정치인들이 군을 그들의 지원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이 외교·안보정책 결정에 있어서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외교·안보정책의 보수화를 유도하게 된다.³⁹⁾ 이와는 반대로 콜튼의 참여모

텔은 정치지도권 승계시기에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떠한가? 북한의 정권수립기에 있어서 군부 엘리트의 역할은 군사분야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권력수립 초창기에는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에서 투쟁해 온 원로들이 대부분 핵심권력을 차지한 반면, 군부출신은 김일성 수상, 김책(평양정치군사학원 원장) 부수상, 최용건(인민군 총사령관) 민족보위상, 박일우(조선의용군 부사령관) 내무상을 제외하면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제2차 당대회에서 당권력의 핵심인물로 구성되는 정치위원 총7명⁴⁰⁾ 중 3명(김일성, 김책, 박일우)만이 지명되었을 뿐이다. 이후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김일성은 그의 유일 권力的(monolithic)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북한의 군부를 포함한 전사회단체를 당의 직접적인 지도와 통제체제를 강화했다. 동 기간 김일성은 군대내 당조직을 강화하여 군에

39)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 32.

40) 2차 당대회에서 지명된 정치위원을 서열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일성(내각수상), 2. 김두봉(북노당 위원장), 3. 허가이(당조직 부장), 4. 김책(부수상겸 산업상), 5. 박일우(내무상), 6. 최창익(재정상), 7. 주녕하(교통상).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204 및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서울: 서울신문출판사, 1995) 참조.

〈도표 3〉 제1차 내각관료 구성(1948.9.9)

직 위	성 명	당 파	군사관계	군사직책
수 상	김일성	북노당(빨치산파)		
부 수 상	박헌영	남노당(국내파)		
부 수 상	김 책	북노당	군 사	평양정치군사 학원 원장
부 수 상	홍명희	민주독립단		
국가계획위 원회위원장	정준택	북노당		
민족보위상	최용건	민주당 (북노당빨치산)	군 사	인민군 총사령관
국가검열상	김원봉	인민공화국(연안파)		
외 무 상	박헌영	(겸 직)		
내 무 상	박일우	북노당(연안파)	군 사	조선의용군부 사령관
산 업 상	김 책	(겸 직)		
농 업 상	박문규	남노당		
교 통 상	주령하	북노당		
교 육 상	백남운	근민당		
체 신 상	김정주	천도교 청우당		
사 법 상	이승엽	남노당		
문화선전상	허정숙	북노당(연안파)		
노 동 상	허성택	남노당(소련파)		
보 건 상	이병남	무소속		
도시경영상	이 용	신진당		
무 임 소 장	이극로	건민당		

출처 :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 (서울: 서울신문출판사, 1995) 참조.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체계를 확립하면서 군부가 그의 유일 권력 체제 구축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을 불식시켜 나갔던 것이다. 전쟁 직후 북한의 군부에는 민족보위상 최용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안파 출신들이 많은 요직을 점하고 있었다. 민족보위상 副相 김웅(大將), 총참모장 이권무(大將), 副총참모장 이상조(소장), 제4군단장 장평산(중장)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에 의하여 이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⁴¹⁾이 단행되었다. 당시 숙청된 군장성 및 고급군관(연대장, 부사단장급)의 수는 당시 인민군대의 핵심엘리트 군관들의 1/3에 해당되는 것이다. 동시에 소련파 군부 엘리트들의 일부도 숙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련파 장령들 중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종학(상장), 김열(중장), 정학중(소장), 김만석(소장), 김철우(소장), 김태건(소장), 김칠성(소장: 해군)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숙청을 통해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김일성은 그의 권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었다.

41) 당시 민족보위상과 내무성에서 숙청된 연안파 출신 고위 장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일우(내무상), 대장(2): 김웅, 이권무, 상장(1): 김을규, 중장(4): 박일훈, 왕연, 방호산, 장평산, 소장(15): 김한중, 김익성, 최아립, 주연, 김철원, 김세광, 정영, 왕백인, 판건희, 조관, 주혁, 심청, 전용석, 이추남, 이림.

다른 한편으로 김일성이 연안파, 소련파의 반대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정권을 보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 빨치산 동료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김일성은 빨치산 출신인 최용건, 최현, 오진우, 김창봉, 이두익, 이을설, 최민철, 정병갑 등을 핵심요직에 포진시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조직부와 비서국을 확고하게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반대세력의 도전을 효율적이고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이 채택된 이후부터 국방건설 우선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북한의 군부가 영향력을 신장시킬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전체 중앙위원 85명 중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파가 최고 다수에 해당하는 35명이나 되었다. 더 나아가 조선노동당 내에 군사위원회가 신설되고 군부엘리트들이 대거 당에 기용되었다. 노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11명의 정치위원 중에서 군사관련 인물이 김일성을 포함하여 7명⁴²⁾이나 되었다. 또한 군인이 민간부문의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⁴³⁾ 이와 같은 군부 엘리트의 득세는 자연히 당

42) 김일성(최고사령관), 최용건(차수), 김일(민족보위성 副相), 박금철(군사위원회 위원), 김창만, 김광협(대장), 남일(대장).

43) Suck-Ho Le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Seoul: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967년 3월 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당조직 부위원장), 이효순(대남담당비서), 김도만(당선전선동부장), 허석선(당교육과학 부장) 등 당료파가 경제건설 및 문화생활 충족 등의 정책을 우선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최용건(상임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차수), 김광협(민족보위상 대장), 오진우 대장 등의 군사파들은 전쟁준비 강화를 주장하였다. 결국 군사파의 승리로 당료파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갑산파들이 대거 숙청되고 난후 자연히 군사 우선주의 당정책이 강화됨으로써 군사파의 영향력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러한 군부 영향력의 강화가 ‘군파별주의’나 ‘군별관료주의’로 발전되어 그의 유일적 권력체제 구축에 위협세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군부 내 대숙청을 단행하였다.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1969.1)에서 단행된 대숙청이 그것이다. 당시 민족보위상 김창봉(대장), 총참모장 최광(대장) 등은 군사정책 우선의 당정책에 힘입어 ‘군별주의’를 조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군사중시주의 원칙을 고집하는 대신 군대 내의 당정치·사상교육의 불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고 있다.

그 결과 김창봉, 최광을 비롯하여 최민철, 정병갑, 김정태, 허봉학(상장), 김양춘(중장), 유창권(중장: 해군사령관) 등의 장령 수십 명과 사단장, 참모장, 부사단장급(상좌·대좌) 군부엘리트들이 일시적 또는 영구히 제거당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과 관련한 주요 비판 내용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무시 및 군내 정치기관의 기능약화 도모 그리고 군벌관료주의 조장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69년 10월 27일 조선인민군 대대장, 정치부대대장, 대대사로청위원장대회에서 한 “현정세와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몇 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난날 반당반혁명분자들은 당의 군사로선을 잘 집행하지 않고 군대안에서 나쁜 장난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쁜 놈들의 반당반혁명적인 죄행을 폭로하고 그들을 우리 당대렬에서 내 쫓았습니다.

그후 인민군대에서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뿌린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대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가고 있으며 군벌관료주의가 적지 않게 극복되었습니다. 아직 부대들에 군벌관료주의잔재가 좀 있지만 그것도 점차 극복될 것입니다.

지난날 인민군대안에서 유명무실하던 당위원회 사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홀시하던 현상도 없어지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기풍이 서가고 있습니다.”⁴⁴⁾

김일성은 이와 같은 명목으로 군대의 대숙청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엘리트들의 기존 당정치사업 참여의 폭을 유지하였다. 제5차 당대회(1970.11)에서 선출된 당중앙위 정치국 정치위원 12명 중에서 김일성을 포함하여 4명이 군사관련 인물들이다.

그런데 북한 군부 엘리트들의 당정치 참여의 폭을 넓혔다고 하여 ‘군벌주의’와 같은 독자적 세력범위 확장을 허용하였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군부의 당정치 참여는 당의 유일적 권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북한 인민군 지도부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어 김일성의 교시와 당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1969년 1월 군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창봉 등의 군부요인이 숙청된 후 당에 의한 군부통제체계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당과 분리되어 군부 독자세력 구축을 위한 일체의 행

44)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24」, p. 259.

위들이 크게 억제되었다. 실제로 1969년 1월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대 내의 정치기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토의된 결과, 군관련 모든 명령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위원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는 결정을 채택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1969년 11월 7일 “인민군대의 당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제하의 조선인민군 집단군, 군단 정치부 조직부장들을 파견하면서 한 연설에서 “부대앞에 나서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반드시 당위원회에서 토의한 다음 부대장과 정치위원, 참모장 세사람이 서명하여 명령을 떨어야” 한다고 한 것은 “부대장이 제 멋대로 부대를 이동시키거나 사람을 망탕 때리거나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군사지휘관의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김일성의 최측근 세력인 빨치산파들을 중심으로 군부의 핵심 지도 인물을 구성함으로써 김일성의 지도노선 구축에 최대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군사관련 인물로서 제5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위원 전원이 김일성과 같이 빨치산 출신이다. 김일성과 당에 대한 이들의 절대적 충성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 인민군대가 김일성 유일권력체제 구축에 적극 헌신하도록 유도되었다. 1974년 2월 11~13일까지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김정일이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 이것은 오늘 당이 인민

군대 앞에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구호”라고 하여 인민군들을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김일성주의 정수분자로 키워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⁴⁵⁾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한편으로는 군에 대한 당의 정치적 통제를 개선·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군대를 당의 김일성 유일권력체계 구축작업을 위한 전위대로 삼고자 군부 핵심인물들의 정치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당·군의 갈등을 강조하는 당·군 이원적체계로 보다는 당·군이 하나로 융합되는 당·군 일원화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당·군 일원화체계의 강화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하나는 김일성 유일정치체계를 공고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유일적 권력체계를 기반으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승계체계 구축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김일성 유일체계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업적을 바탕으로 그의 승계체제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김정일은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라는 제하의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에서 “부대가 자기 임무를 원만히

45) 卓珍 외 2인, 「김정일 지도자」 제2부 (東京: 東邦社, 1984), p. 281.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이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도록”⁴⁶⁾ 해야함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적 전개해 나감으로써 인민군대내 장병들의 사상교양과 부대관리, 군사장비와 군사훈련 등을 개선·강화해 나갔다.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은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권을 장악하면서 이를 하나의 핵으로 전사회의 김일성주의화와 그의 지도권 강화를 꾀한 대중운동이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군대내 정치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으로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이외에도, 「속도전」, 「오중흡, 김혁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김정일이 항일혁명 시기에 김일성에게 충실했던 「오중흡, 김혁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을 전개한 것은 군을 포함한 전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오중흡, 김혁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 등의 대중운동은 1979

46)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 선집 2」, p. 462.

년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였다.⁴⁷⁾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력 후계자로 공식 지명됨으로써 이러한 대중운동을 군대 내에서 본격적으로 강화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은 그의 영도하에 군의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군을 유일사상체계하에 혁명전력화 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군내에서의 그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 인민군 내에서의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의 전개는 군의 유일사상교육, 사격술, 지형조건에 적응한 전법의 완성, 규율확립과 강인한 체력단련 등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김정일이 이러한 운동을 그 자신의 영도하에 활성화함으로써 군의 충성과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정권승계자로서의 그의 입지를 강화해 왔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김정일은 군대 내에 ‘개인의 주관과 독단’에서 기인하는 ‘군벌관료주의자’들이 나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를 강화하고 이의 집체적 지도를 올바르게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전에는 지휘관들이 제기된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

47) 卓珍 외 2인, 「김정일지도자」 제2부, p. 281.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별관료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관철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군별관료주의자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⁴⁸⁾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은 그들의 인민군대에 대해서 당사업에의 참여와 당에 의한 통제 메카니즘을 동시에 발전·강화함으로써 군의 충성을 최대한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75년 2월 이용무 총정치국장은 ‘당중앙(김정일을 호칭함)이 제시한 「전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나가야만 한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⁴⁹⁾ 또한 같은 해 10월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오진우는 ‘당창건 30주년’ 기념논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뜻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당중앙이 제기하는 모든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며 최후까지 관찰하고,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반대되는 어떠한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타협없는 날카로운 투쟁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사실은 1980년 10월 10~14일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되고 난 이후부터 북한 군부의 정치적 세력이 상대적으로

48)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김정일 선집 2」, p. 464.

49) 「근로자」(1975.2).

〈도표 4〉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의 군인의 대표율

당 대 회	민간인	군 인	전 체	% = 군인/ 전체	1MM*	% = 1M/ 전체
1차(1946.8)						
전 체	11	2	13	15%	3	23%
구 인 사	-	-	-			
신진인사	11	2	13			
Returned	-	-	-			
2차(1948.3)						
전 체	13	2	15	13%	3	20%
구 인 사	7	1	8			
신진인사	6	1	7			
Returned	64%	50%	61%			
3차(1956.4)						
전 체	13	2	15	13%	5	33%
구 인 사	6	0	6			
신진인사	7	2	9			
Returned	46%	0%	40%			
4차(1961.9)						
전 체	15	1	16	6%	5	31%
구 인 사	10	1	11			
신진인사	5	0	5			
Returned	77%	100%	73%			
2차회담(Conference)						
전 체	14	6	20	30%	12	60%
구 인 사	6	1	7			
신진인사	8	5	13			
Returned	40%	100%	44%			
5차(1970.11)						
전 체	12	4	16	25%	7	44%
구 인 사	6	2	8			
신진인사	6	2	8			
Returned	43%	33%	40%			
6차(1980.10)						
전 체	24	10	34	29%	12	35%
구 인 사	6	3	9			
신진인사	18	7	25			
Returned	50%	75%	56%			
전체평균						
1차~6차	102	27	129			
Returned	53%	51%	52%	21%	47	36%

* 1MM : 군인+군대 배경을 가진 민간인

출처 : Suck-Ho Le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9), p. 283.

〈도표 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의 군인의 대표율

당 대 회	민간인	군 인	전 세	%=군인/전체
1차(1946.8)				
전 체	35	8	43	19%
구 인 사	-	-	-	
신진인사	35	8	43	
Returned	-	-	-	
2차(1948.3)				
전 체	72	15	87	17%
구 인 사	23	7	30	
신진인사	49	8	57	
Returned	66%	86%	70%	
3차(1956.4)				
전 체	92	24	116	21%
구 인 사	30	7	37	
신진인사	62	17	79	
Returned	42%	47%	43%	
4차(1961.9)				
전 체	97	38	135	21%
구 인 사	25	16	41	
신진인사	72	22	94	
Returned	27%	67%	35%	
5차(1970.11)				
전 체	133	39	172	23%
구 인 사	34	20	54	
신진인사	99	19	118	
Returned	35%	53%	40%	
6차(1980.10)				
전 체	201	47	248	19%
구 인 사	70	26	96	
신진인사	131	21	152	
Returned	53%	67%	56%	
전체평균				
1차~6차	629	172	801	21%
Returned	45%	63%	21%	

출처 : Ibid., p. 29.

약화되어 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제6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위원수는 상임위원 5명⁵⁰⁾을 포함하여 19명⁵¹⁾이며 후보위원 수는 15명⁵²⁾이다. 정치국 위원 중에서 군인이 10명이나 된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5인중 1인(오진우)이 군인이다. 제1차 당대회에서부터 6차 당대회까지 조선노동당 정치국에서의 군인의 대표율은 평균 36%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1차~6차 당대회 사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의 군인의 대표 비율 역시 평균 21% 정도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표 6>을 살펴보면 6차 당대회 이후부터 군부의 당정치국 진출 비율은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 5월에 개최된 제9기 1차 최고인민회의 때는 2명의 군부인물(오진우, 최광)만이 당정치국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5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비서 9명⁵³⁾ 중 4명이나 군부인물⁵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반해, 6차 당대회에서 선출

50)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리종욱.

51)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리종욱, 박성철, 최현, 림춘추, 서철, 오백룡, 김중린, 김영남, 전문섭, 김환, 연형묵, 오극렬, 계응태, 강성산, 백학림.

52) 허담, 윤기복, 최광, 조세웅, 최재우, 공진태, 정준기, 김철만, 정경희, 최영림, 서윤석, 리근모, 현무광, 김강환, 리선실.

53) 최용건, 김일,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김중린, 한익수, 현무광, 양형섭.

54) 최용건, 김일, 오진우, 한익수.

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10명(총비서 김일성 포함)⁵⁵⁾ 중 군부인물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러한 군부의 당정치국 및 비서국 참여 비율의 하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기

〈도표 6〉 북한 정치국내 군부인물 구성 추이

	6차 당대회 (1980.10)	당6기 6차회의 (1982.8)	당6기 8차회의 (1983.12)	8.15 40주년 행사 (1985.8)	제8기 최고인민 회의 (1986.11)	제9기 1차최고 인민회의 (1990.5)
정	오진우	오진우	오진우	오진우	오진우	오진우
	최 광 (82.4死)	오백룡	오백룡 (84.4死)	오극렬	오극렬	최 광
위 원	오백룡	전문석 (82.9일시 잠적)	오극렬	전문섭		
	전문섭	오극렬	백학림	백학림		
	오극렬	백학림				
후 보 위 원	최 광	최 광	최 광	김두남	최 광	김철만
	김철만	김강환	김두남	최 광		
	김강환	김두남	김강환	김강환		

출처 : 차두현, “김정일 권력승계체제와 북한군부,” 「국방강론」, 제 2집 (1990.9), p. 378.

55) 김일성(총비서), 비서: 김정일, 김중린, 김영남, 김환, 연형묵, 윤기복, 홍시학, 황장엽, 박수동.

구로서 당규약에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서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기능과 임무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정치국내 군부인물의 진출 하락 의미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에 더하여 당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어 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당사업의 실무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비서국 내의 군부인물의 참여비율의 변화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 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당규약 제3장 26조)함으로써 당사업의 실무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비서국은 당중앙위원회의 당행정실무집행기관으로서 모든 정책노선과 당의 견해는 이 기구로부터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 실질적 최고 정책지도기관이다. 당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김정일이 비서국 비서로 선출되어 이를 직접 관장해 옴으로써 당의 실질적이고도 전반적인 업무를 실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국 비서로서의 군부인물의 완전배제는 당내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의 정치적 세력의 상대적 강화는 당의 기본정책 결정 및 수행 과정상의 지나친 개입을 의미한다. 이는 김일성 유일적 권력체계 수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군부가 당내에 지

나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김일성·김정일이 집중적으로 비판해 왔던 군벌관료주의와 같은 폐단이 생겨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유일적 권력체계 공고화와 김정일의 권력승계체제 구축 全過程을 통해서 북한은 점진적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의 권력승계 사실이 공식화된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이후부터 북한 군부의 상대적 정치적 영향력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신 북한은 군사엘리트들에 대한 전문화⁵⁶⁾를 도모하여 당의 유일적 권력체계를 수호하는 군사적 전위대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군사전문화는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의 군사부문 이익집단적 차원의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 군대는 군사고유의 이익을 내세워 당의 지도노선을 부정하거나 거역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북한 군대 고유의 이익은 당정책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당정책 노선에 반하는 것일 경우 이는 군벌관료주의라 하여

56) 이정식, 스칼라피노 교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북한 군부의 좌관급 장교들이 그 이전의 세대들에 비하여 보다 직업적 전문성을 띠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Ba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1008.

심각한 타도의 대상이 된다. 결국 북한 군대의 전문화라는 것은 당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당의 유일적 지도에 따라 군이 군사고유의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군대는 혁명군대임을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고유의 사업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군대와는 달리 당정치 사업에의 직접적 참여와 정치사상적 교양교육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북한 군대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군의 정치적 세력확대를 의미하는 정치적 개입은 결코 아니다. 김일성 유일적 권력체계 공고화 및 김정일의 권력승계체제 구축에 있어서 북한 군대는 정치 영향력 차원의 세력으로서 보다는 전체에 해당하는 당의 일부분으로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옹호하고 선도해 나가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당·군관계는 콜코비츠의 갈등모델에서 콜튼의 참여모델로 접근해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군부의 정치적 서열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는, 권력승계시 군부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갈등이론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4. 黨·軍 지도부의 價値(Leadership Values) 共有

콜코비츠의 갈등모델은 당·군 지도부간의 價値에는 고유
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이완되기만 하면 군대의 국내정치 개입활
동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참여모델에 의
하면 군부 지도자들이 당과 국가 시민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비록 완
화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군의 정치적 개입의 확대에 귀결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⁵⁷⁾

그런데 콜코비츠가 시민 지도자와 군부지도자들이 갖고 있
는 가치들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
리, 현재 북한의 시민지도자와 군부지도자들은 가치들을 공
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양측 지도자들은 安
定과 秩序維持에 그들의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련 군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핵심가치를 가
지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① 정치적 질서에 대한 높은 관
심, ② 정치적 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③ 행정적 과정에
대한 비정치적 시각, ④ 강한 민족주의적 감정, ⑤ 내외부적

57) John W. R. Lepingwell, "Soviet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August coup," *World Politics*, Vol. 44, No. 4 (July 1992) p. 544.

위협에 대한 관심 등이다.⁵⁸⁾ 이러한 가치들은 북한 군대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많다. 북한 김일성은 정권수립 이후부터 내부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민족국가적 단결을 추구하며, 외부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체계를 강화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주체사상의 구현으로 달성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마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 부동한 지침”⁵⁹⁾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노선을 관철할 것”⁶⁰⁾이라 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자립·자위의 혁명적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전인민에 강요와

58) Ibid., p. 547.

59)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33.

6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533~36

설득을 병행해 온 것이다. 먼저 그들은 內政上의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내부적 질서와 안정을 구축하고자 했다. 內政上의 주체성 수립이라는 미명 아래 사대주의,⁶¹⁾ 교조주의, 종파주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김일성주의를 근간으로 한 유일적 정권 수립에 성공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내적 안정과 질서를 구축하였다.

또한 북한은 공식적으로 민족주의적 단결을 거부해 왔으나⁶²⁾ “사회주의적 애국주의⁶³⁾라는 언술을 통해 노동자·농민 계급중심의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공존시킴으로써 민족국가를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단위로 책정했다.”⁶⁴⁾

61) 소련 또는 중공을 배경으로 소련 발전모델 또는 중국 발전모델의 맹목적 모방을 꾀한 소련파, 연안파.

62) 김일성은 민족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민족주의는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선 자기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 배치됩니다. 부르조아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적대되며 대중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합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236.

63)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 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선집 4」, p. 379.

64) 전상인, 「北韓 民族主義 研究」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자주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 국가적 단결을 위해서 보다 노골적으로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학자 리규린은 김정일의 민족에 관한 개념을 해설하면서 민족국가적 단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투쟁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어 나간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⁶⁵⁾

그리고 외부적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북한 당국은 자위를 기본지침으로 하는 군사정책을 표방해 왔다. 북한의 국방자위정책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통한 “남조선 해방”과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그들의 “혁명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북한의 외부적 위협에 대한 인식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위협성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지도부들은 그 중에서도 미제국주

p. 92.

65)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2.), p. 6.

의자들에 의한 위협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판문점 휴전협정 이후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서 이중으로 포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시켜 왔으며 유엔기구의 무대에서 북한을 ‘평화파괴’ 국가로 낙인찍히게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10)뿐만 아니라 미·일 안전협정(1960.1)에 의해서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다. 사실상 미·일협정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한국관련 조항⁶⁶⁾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본질적으로 침략 위협성을 지닌 제국주의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상목표인 “남조선 해방”을 가로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인민들

66) 동 조약 제4조에 “일본국의 안전과 극동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양국(미·일)중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 조약 6조에는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극동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의지를 구체화하였다. 鄭光河,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p. 293 일본의 방위관련 조약 및 문서 참조.

이 한결같이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공유하도록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했다.

동시에 북한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통한 “남조선 해방”과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그들의 “혁명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조치의 일환으로 국방자위정책이 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혁명전쟁의 승리를 확고하게 담보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군사사상으로서”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들에 의하면 “자위원칙의 혁명적 본질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풀어나가며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자체의 힘으로 보위하는 데 있다”⁶⁷⁾고 한다. 자위원칙의 실제적 표현은 바로 국방력 강화와 연결된다.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토의 요새화 그리고 전군의 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 4대군사노선의 채택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목표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사회 단체에 대한 사상교육사업을 실시해 온 결과 그들 사회단체의

67)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p. 728.

전인민들을 거의 획일적인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있어서 군부가 예외일 수는 없다. 김일성은 군대 정치일꾼들에게 “인민군대가 좋은 무기로 장비되었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며 누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모르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⁶⁸⁾고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념, 전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신념,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멸망시키고 세계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신념”⁶⁹⁾을 가진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김일성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배격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체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울데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인민군 군사·정치일꾼들에게 “다른나라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잔재를 없애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하며 “군인들에게 주체를 세워야할 필요성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⁷⁰⁾고 역설하였다.

68)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24」, p. 267.

69) 위의 책, p. 249.

그리고 제국주의는 원래 침략적이며 제국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침략적 본질이 변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가 있는 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⁷⁰⁾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서 춤이나 추며 안일하게 지내게 될 경우 제국주의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해 나설 것인 바, 언제나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들의 침공에 대처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⁷²⁾을 북한 당국은 그들의 군대에 인식시키고자 했다.

북한은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을 위하여 군당조직생활을 강화해 오면서 이들 당조직을 통하여 군대를 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군인들 속에 당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군을 당의 '두리'에 놓여 있도록 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군대에 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하여 당조직과 군정치위원제를 두어 관리하여 왔다는 것과 군대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까지도 단행했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

70)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296~301.

71)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14」, p. 371.

72) 위의 책, pp. 371~73.

와 같다. 그들은 인민군인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노동당의 붉은 혁명전사들이라고 하면서 인민군인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우수해야 하며 사상의식이 가장 높아야 하며, “인민군대는 비단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단련하는 공산주의학교로 되여야”⁷³⁾ 한다고 강변해 왔다. 더 나아가 여타 공산주의 국가 군대의 경우와 같이 북한군 장교의 승진에도 군사적 능력과 경험에 더하여 그들의 유일지배 정당인 노동당이 제시한 정통적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수용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⁷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인민군들은 고위직에 올라가면 갈수록 자연히 당지도부와 동질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군 장령급 고위층을 포함한 장교들은 경제적 으로나 사회적으로 비교적 높은 지위를 구가하게 되었다. 1989년에 귀순한 전 북한군 김광춘 씨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당과 김일성의 혁명과업을 제일선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득권을 누리는 위치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조국을 지키는 역사적 과

73) 위의 책, p. 265.

74) Nordlinger, *Soldiers in Politics*, p. 15.

업 수행을 안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성분조사를 거친 사람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 군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같다.”⁷⁵⁾

5. 평가: 당·군 一元化體系 구축

북한 군대 내의 정치 및 당조직기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 콜코비츠가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독자 세력 형성으로 당정책지도 노선을 위협하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군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군내부의 특수 조직으로서의 적극적 통제기능과, ② 군 자율성과 군 전문직업주의를 제한적으로 용인하면서 군을 당사업에 적극 참여 시킴으로써 당·군의 일체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일적 권력체계 강화와 김정일 권력승계 구축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당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는 체제가 안정화되어 가면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안정화에 따라 군의 자율성과 전문직업주의화를 통한 군에 대한 참여모델적 통제

75) 김근태 편,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 (서울: 의암출판, 1993), pp. 191~92.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1960년대의 권력공고화 단계를 거쳐서 1970년대부터는 공고화된 유일적 권력체계를 관리·유지하는 體制維持段階(system maintenance stage)⁷⁶⁾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북한 군부엘리트들이 당정치국 정치위원에서나 서기국 비서직에서 점차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군

76) 허스프링과 볼기에스(Herspring and Volgyes)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당·군관계의 ‘발전모델’(developmental model)을 제시했다. 발전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과 군은 별개의 제도이며 군은 당의 체계모니에 대한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을 소유하고 있다. 둘째, 당·군관계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스프링과 볼기에스는 소련과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의 당·군관계는 여러 단계 즉 變革(transformation), 鞏固化(consolidation), 體制維持(system maintenance)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변혁 단계는 구체제의 권력엘리트 및 사회구조에 대한 척결을 포함하고, 공고화 단계는 새로운 사회질서 구축을 의미하며, 체제유지 단계는 혁명의 결과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이들은 군부가 당의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를 참작하여 당·군간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당의 가치에 대한 군부의 수용(accomodation)의 폭이 넓어질수록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다. 북한은 이미 1970년도에 체제유지 단계(system maintenance stage)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David E. Albright,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32, No. 4 (July 1980), pp. 565~66.

부의 당적 역할에 대한 완전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부의 고위 지도자들은 군사고유의 업무를 관장하는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군사관련 전반적인 당적 사업을 수행해 왔다. 당규약 제3장 27조에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당군사위원회는 비상시와 전시 등과 같은 특수상황시에 군사부문의 최고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며 여기에서의 결정은 곧 위원장인 김일성 (또는 서열 2위의 김정일)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당중앙위 군사위원회는 김정일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오진우(사망), 최광, 백학림, 이을설, 이두익, 조명록 등의 당중앙위 군사위원들은 원수·차수급으로 김일성과 같이 항일유격대 출신의 혁명 1세대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항일무장투쟁과정을 김일성의 보호와 지휘 아래 보냈으며 해방 후에도 김일성의 특별한 관심 아래 군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김일성·김정일에 대해서 최대의 충성심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당·군 지도부는 점차적으로 거의 동질적인 가치를 수용하게 되는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당·군관계는 당·군을 갈등관계로 이원적으로 보는 갈등모델에서 당·군의 합치(일원적 관계)를 강조하는 참여모델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온 경향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군에 대한 당의

획일적인 통제를 위한 감시 및 사찰기능만을 강화해 왔다고 보다는 군을 당의 지도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과 군전문직업 주의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참여를 통한 통제를 위한 당·군융합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하용출 교수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당·군관계는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 보다는 합치(congruence)가 우세한 것으로”⁷⁷⁾보인다고 했다.

북한 사회가 병영사회라는 일반적 견해를 수용할 때, 병영사회에서의 군부의 잠재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추측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부의 잠재적 영향력을 당으로 하여금 흡수토록 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당·군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에 있어서 성공적인 군부 쿠데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콜코비츠가 지적한 바대로 당에 의한 군부의 인위적인 통제의 영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당의 지도체제를 근간으로 한 당·군융합 즉 일원화체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당에 의한 군부의 통제장치가 어느 정도 이완된다

77) 河龍出, “중국, 북한, 베트남의 당·군관계 - 북한을 중심으로-,” 김달중, 스칼라피노 공편, 「아시아 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서울: 법문사, 1989), p. 267.

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쿠데타와 같은 군부의 돌발적인 행위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당·군 융합체제는 어떠한 경우에 깨어져 군부의 잠재적 영향력이 돌출하게 될 것인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승계정권은 북한의 당·군 융합체제를 깰만한 상황적 요인을 제공할 것인가? 그러한 상황적 요인들은 김정일 정권의 어떠한 변화에서 기인할 것인가?

第Ⅲ章 김정일 정권하의 黨·軍關係： 당·군 융합의 持續과 變化 전망

러핑웰(John W. R. Lepingwell)은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기간 동안 ① 안보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군부의 자율권에 대한 위협, ② 국가적 통합과 안전에 대한 군사적 핵심가치에 대한 도전, ③ 군부의 정치개입 증대, ④ 민간정부의 권위와 정통성 쇠퇴 등에 의해서 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한다.⁷⁸⁾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후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까지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언제 이루어 질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김정일의 권력승계 사실 자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 정권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출범하여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록 김정일이 일찍부터 권력승계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쳐왔다고 하나 실제로 그의 정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새로운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표

78) Lepingwell, "Soviet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August coup," p. 550.

방해 나감에 따라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약화 또는 붕괴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조치들이 수반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까지 안정적인 융합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의 당·군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 요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군부의 自律性 유지

김일성 정권시대에 북한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군부가 실제로 나름대로의 자율성(autonomy)을 행사해 왔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먼저 답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의 문제는 군사분야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핵시대에 있어서 국가안보정책은 압도적인 세력(군사력)의 축적을 중심으로 했던 이러한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 한 사회가 그의 생존을 확보하려 하거나, 혹은 국제적으로 그의 열망을 실현하려고 할 때 취하게 되는 모든 행위들을 포괄하는 정책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내부적인 국가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되는 국가안보는 ① 국가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력의 도구들(군

사·경제·과학 등)을 조작하는 행위와 ② 국가의 정치적·도덕적 가치(정치), ③ 전략적 측면에서 국가적 갈등관계 속에서 한 행위자로서의 국가와 관계를 가지는 것(외교)을 포괄하게 된다.⁷⁹⁾

이와 같이 국가안보정책 결정은 군사·경제·과학·정치·외교적 제 요소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군사정책이 안보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있어서 안보정책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은 일반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金父子가 국내외의 모든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파악·결정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연히 그들은 중요 정책들에 대한 최종결정을 위해서 당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어느 정도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부자는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당 및 국가기관의 관료조직기구를 통하여 중요 정책들이 결정되고 시행되도록 해왔다고 볼 수 있다.⁸⁰⁾

79) 신정현·백종천 편저, 「국가안보론」(서울: 일신사, 1985), pp. 19~21.

80) 이동훈, “북한 군사정책 결정 구조 및 과정과 군비통제의 문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1993.6), pp. 133~34.

북한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관련된 주요 직무와 기구는 주석, 당총비서, 당비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위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군최고사령부, 인민무력부 등으로 요약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혁명대렬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 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 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조선노동당 규약 제3장 23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당규약 제3장 24조)한다. 따라서 안보분야를 포함한 북한의 제반정책의 결정이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당·정·군의 중요 고위 엘리트들이 함께 참여하여 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해 왔다.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북한의) 군대를 지휘”(당규약 제3장 27조)하는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1992년 4월 9일 수정된 헌법 제114조)하는 국방위원회에도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부의 중요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두 기구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이지만 군사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며 그 구성 인원도 상당수 중복되어 있다. 즉 국방위원회 위원 10인⁸¹⁾중 6명(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최광, 이을설, 주도일)이 당중앙군사위원⁸²⁾이다. 이와 같이 군사정책을 주요 요소로 포괄하고 있는 북한의 안보정책 결정에 있어서 군부의 직접적인 참여로 군의 전문적 자율성이 제고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정치국이나 비서국 등으로부터 군부를 배제하여 그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약화시킨 반면, 당중앙위원회에 실질적인 군사 지도기관인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부 최고위 엘리트들을 포진시켜 군사관련 정책을 지도해 왔다는 사실은 북한 군부의 전문적 자율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군부의 전문적 자율성 제고를 통하여 그들의 당정책에 최대한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장려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 군부의 전문적 자율성은 당의 유일적 권력체계를 수

81) 김정일(위원장), 오진우(제1부위원장: 사망), 최광(부위원장), 전병호, 김철만, 이을설, 주도일, 김봉률, 김광진, 이하일.

82) 김일성(위원장), 김정일, 오진우(사망), 최광, 백학림, 이을설, 주도일, 이두익, 김두남, 이하일, 김익현, 조명록, 김일철, 이봉원, 오용방, 김하규.

립하기 위한 것이지 당의 유일적 권력체계에 대항하는 군부 고유의 집단이익 표출에 대한 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김일성은 이러한 군부의 돌출행위를 일컬어 군벌종파주의라 하여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이의 제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군사적 요소(military factor)가 아주 폭넓게 지배하고 있는 병영사회인 북한에 있어서 군사부문의 역할 비중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 이러한 군사부문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부의 주도적 참여를 의미하는 군자율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옴으로써 군부가 당정책의 관철과 수호를 위한 전위대로 남아있게 된 중요한 요인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김일성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일 정권에서도 북한의 안보정책 결정 과정시 이러한 군부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구소련에 있어서는 브레즈네프 이후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부의 자율성이 여타 문민 지도자들에 의해서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군부의 불만이 노골화된 적이 있다.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문민 지도자가 안보정책을 수립하였지만 군부는 국가 독트린의 군사·기술적 부분을 지배해 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북한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고르바초프하에서는 외무부 장관이라든가 다른 문민 지도자들이 구소련의 안보정책을 좌지우지 해나감으로써

군부의 자율성은 위협받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하의 구소련에 있어서 안보정책에 관한 민간 지도자와 군부간의 의견 불일치는 대외관계와 국가 전략 및 독트린 형성에 있어서 군부의 역할과 같은 근본적인 이슈에 집약되었다.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는 군부가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정책을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군부의 그러한 수용은 그렇게 내키지 않은 것임에 분명하였다. 또한 세바르드나제 외무부 장관이 주동적으로 강조해 나간 군비통제는 군부로부터 저항에 부닥치게 되었다. 안보정책에 대한 이러한 갈등은 군부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군부의 핵심 목표(국가의 안보를 제공할 의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되었다. 군사적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군부 고유의 정책적 편향을 방어하기 위하여 구소련 군부는 한층 더 목적을 높이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결국 1990~91년 겨울과 1991년 이른 봄에 당·군간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⁸³⁾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이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와 같은 과감한 개혁·개방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김정일 정권은 고르바초프와는 달리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의 기초 위에서 탄생한 승계정권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83) Lepingwell, "Soviet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August coup," pp. 550~51.

때문에 기존의 당적 유일권력체제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주체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4대군사노선 정책과 폐쇄적 병영사회체제를 고수함으로써 군사우선주의정책을 지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비록 김정일이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나 대외안보 환경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군사우선주의정책을 약화 또는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구소련과는 달리 당적 유일권력체제가 유지되는 한 군부가 그들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정책에 도전하는 돌출행위를 쉽사리 감행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군부는 오히려 이러한 당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어서 군부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당의 군대’라는 종속성 속에서 용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대학원 이석호 교수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이러한 논리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중요한 대외정치, 경제, 군사협력의 구조와 원리가 붕괴되었고 나아가 환경의 변화가 체제의 존재를 위협할 때 대내외 정책을 변화시켜 적응해야만 한다. 이때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지지세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정책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군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이다.”⁸⁴⁾

2. 군사적 핵심가치 보호: 國家的 統合과 政治的 安定

일반적으로 軍 自律性和 국가적 통합 및 정치적 안정이라는 군사적 핵심가치 간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군사전문직업주의(military professionalism)는 국내적 질서와 안정유지를 위하여 군사력이 이용되는 것을 가능한 한 절제되기를 바라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의 분산은 외부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군대는 국가적 단결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핵심가치가 위협받을 때는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라는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대내적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의 개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군대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군대가 대내적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적극 개입하거나 최소한 중립적 태도를 보인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부르조아 자유화를 부르짖고 공산당 영도에 회의를 표시하는 지식인과 학생들의 시위를 계엄부대에 의한 유혈진압한 바 있다. 그리고 1953

84) 이석호,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군의 역할,”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 427.

년 동독의 민중폭동, 1956년 헝가리와 폴란드의 반소폭동,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사태, 1980년 폴란드의 자유노조사태 때에는 계엄령이 실시되어 군이 직접 이러한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개입하였다.

그러나 지난 동구권 개혁에 있어서 군이 대체로 중립태도를 표방함으로써 군이 정치개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⁸⁵⁾ 물론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에서는 경찰 및 군인들이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저지하는 데 배치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저지시키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헝가리의 군부는 이러한 민주화 투쟁상황에서 시종일관 중립의 태도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루마니아에서는 군부가 사회주의독재에 항거하는 투쟁을 저지하여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대열에서 벗어나 오히려 반사회주의독재 투쟁에 직접 가담하여 루마니아의 민주화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구소련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공화국들의 분리독립 운동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을 억제하고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개입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구소련의 많은 고급장교들 역시 고르바초프가 법과 질서가 위협받는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것

85) 安成濩, “동구권 개혁에 따른 북한사회주의노선 변화전망,”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Ⅱ)」 (서울: 통일원, 1990), pp. 255~56.

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소련 군부는 군전문직업주의적 의무를 강조하는 그룹과 국내적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군대개입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룹으로 분열되어 갔다. 이와 같은 구소련 군대의 분열은 그들 군대의 직업전문주의적 전통에 기인한 바 크지만⁸⁶⁾ 그보다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군에 대한 당의 역할이 약화 또는 변화⁸⁷⁾되어 당지도부의 정책에 대한 군부자체 내의 태도가 분열되어나간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떠할 것인가? 1950년대 스탈린

86) 콜튼은 구소련 군대가 정치적 잇슈에 개입하지 않아 왔던 이유로 군대의 직업전문주의, 당·군지도자들의 가치 공유 및 군의 책임성과 영향력의 한계성을 지적한 바 있다. Timothy Colton, *Commisars, Commanders and Autho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 279~81.

87) 구소련에 있어서 공산당 역할의 변화는 공산당을 대체하는 다른 정당들의 결성을 허용하는 1990년 3월의 헌법개정에서 이미 드러났다. 개혁지지자들은 군대 내의 정치위원체계를 없애거나 그것을 사회적 지원 및 카운셀링 서비스 조직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으며 동시에 그들은 군대 내에 있는 모든 당조직 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킬 것을 원하였다. 군대 내의 당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구소련 군대 내에서 상급지도부와 하급지도부 간의 의견차가 크게 불거져 나온 것도 사실이다. Lepingwell, "Soviet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August coup," pp. 544~45.

사망후 구소련에는 스탈린의 우상숭배가 흐루시초프에 의해 격하되고 이러한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 영향은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먼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김일성은 북한내 이러한 개인숭배비판 운동과 수정주의의 영향을 차단과 단절, 그리고 독자적인 사상무장 및 물리적 힘의 축적을 통해서 최대한 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김정일 역시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붕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일성이 행한 것과 비슷한 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사상무장에서 실패한데서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사상강화교육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방송대학」에서 구소련 붕괴시 무장장비 면에서 미군보다 강력한 소련 군대가 무기력하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은 수정주의적 사상변질 때문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전 소련군대는 군사기술적인 면에서 대단히 우세했습니다. 무장장비를 놓고 말하면 사실상 미군무력보다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것처럼 강력한 무장장비를 가지고 있던 이전 소련군이 어떻게 돼서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 제도가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대

의 사상정신 상태가 수정주의 물을 먹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⁸⁸⁾

북한의 이러한 공식적 언급은 만일 북한에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경험한 민주화 개혁운동이 일어날 경우 군이 사상무장을 강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됨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 군부측 역시 당의 유일적 권력체계상의 변화가 없는 한 당·군 융합상태를 지속하면서 국가체제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군대는 당의 유일적 권력체계를 위협하는 어떠한 사회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데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회적 위기사태에 대한 군부의 개입이 북한 군부 자체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직접적 개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군대의 이러한 개입은 안정적인 당정책 노선을 유지 또는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대가 당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끝날 경우 군대는 이전의 임무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오히려 이 경우에 있어서 북한의 당·군관계는 분리보다는 융합의 관계가 보다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지도부가 군부를 정치적 목적

88) 「평양방송」, 1995.3.12.

달성에 여러번 이용해 왔으나 군부의 이러한 경험이 당의 권위체계에 도전하는 쿠데타로 연결된 예는 한 번도 없다. 1967년부터 문혁세력과 반문혁세력간의 투쟁이 격화됨에 따라 모택동은 이 투쟁에서 배태된 정치·사회적 혼란을 진압하고 그가 주도해 온 문화대혁명을 반대해 온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부를 동원하였다. 군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모택동은 반대파의 숙청과 사회적 질서회복에 성공하였다. 그 후 24개성과 자치구에 軍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위원회가 조직되어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마비된 당과 행정기관의 혼란과 공백을 메우는 데 이용되었다.

그 결과 중국군은 이 혁명위원회 활동을 통해 북경과 지방에서 최고의 정치·행정적 권위를 구축하였으나 이것이 군부 자체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는 중국군의 이같은 정치적 개입이 단지 모택동의 영도하에 있었던 당중앙의 명령과 통제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⁸⁹⁾ 1989년 6월 천안문사건의 진압과정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군대를 동원하였다. 당시 당중앙위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던 등소평의 군동원계획의 입안으로 북경 일부지역에 대한 계엄이 실시되고 학생운동은 이들 계엄부대에 의해서 진

89) 신상진·전현준,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당·군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46~48.

압되었다. 이 군부대 동원 역시 중국 당중앙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⁹⁰⁾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군부의 이러한 정치적 개입이 군부로 하여금 체제도전적인 들출행위를 감행하도록 부추키는 동기로 작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3. 군대의 政治參與 제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 군대는 ‘혁명의 군대’로 지칭되어 오면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지녀왔다. 김일성은 “군대내에서 정치생활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민군대는 비단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단련하는 공산주의학교로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⁹¹⁾ 그리고 북한은 군대의 위력이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정일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숭고한 혁명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장병들 사이의 혁명적 동지애와 인민들과의 혈연적 연계, 강철같은 자각적 군사규률은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

90) 위의 책, pp. 53~54.

91)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저작집 14」, p. 265.

대만이 가질 수 있는 정치사상적 우월성입니다.”⁹²⁾

따라서 북한은 일찍부터 그들 군대의 정치사상화를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그들의 군대를 정치사상화하기 위하여 군대내 당조직을 강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956년 4월부터 1961년 9월까지 군대내 정치기관과 당조직을 일체 재정비하여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였다고 한다. 1969년까지만 하더라도 연대까지만 정치부가 있었으나 1969년 이후 당 및 정치기관이 보다 강화되어 말단 중대까지 정치부 계통의 요원이 파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인민군의 정치부 계통은 정치사상 교양 및 사기와 장교(군관)들의 인력 및 인사관리를 담당한다. 군대내 당 및 사로청 조직과 사상교양을 위한 선전선동사업, 붉은기 중대,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 사기대책 수립 및 추진, 그리고 장교들의 보직, 보충, 이동, 승급, 제대 등의 처리와 기록 보고 등이 정치부 계통의 主任務이다. 또한 북한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오중흡, 김혁 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 등의 대중운동을 군대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인민군의 정치사상화를 강화해 나갔다.

92) 「로동신문」, 1991.12.25.

북한 군대의 정치화는 이러한 정치사상화 교육 또는 운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북한 군대의 특징은 비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군에 선거권을 포함하여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헌법에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1992년 4월 수정헌법 제52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은 현역상태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정치국 및 비서국 위원 등을 비롯한 노동당 조직간부로 겸직 선출될 수 있다. 실제로 이에 따라 북한 군사관련 인사들의 상당수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당중앙위원회, 당정치국 및 당비서국의 정·후보위원으로서 직접 활약해 왔다. 그런데 노동당에 의해서 조종되는 지배의 도구에 불과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나 비상설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의 진출은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별다른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북한 당정책의 결정 및 지도 실무기구인 정치국 및 비서국 정·후보위원으로서의 군의 정치적 참여는 북한군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군부의 이같은 직접적인 정치개입이 확대될 경우 당내 군부의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어 그들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노동당의 유일적 권력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여파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그의 권력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군부의 당정치국 및 서기국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억제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부의 당정치국 정·후보 위원으로서의 참여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사실이 공식화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부터 그 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비서국 내의 군부참여는 이미 그 이전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다. 즉 북한에 있어서 정치국이나 비서국에 참여한 현역 군인들이 自然死 등을 통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다른 인물로 채우지 않은 방법으로 군의 정치적 참여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군의 정치·사상화는 군사관련 정책 이외의 당정책의 결정 및 지도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 보다는 정치사상화를 위한 교육과 대중운동에 동참시켜 그들의 군대를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당정책관철을 위한 불굴의 투사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그의 승계권력 공고화를 위한 과도기 단계에는 군에 대한 정치·사상화 노력을 강화하고 콜코비츠의 갈등모델에 근거한 정책으로 군부에 대하여 군당조직 기구에 의한 획일적 통제 메카니즘을 더욱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김일성이 그의 정권 공고화 단계에서 군부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

하여 군부의 지지를 확보해 온 것과 같이, 김정일 역시 승계 권력 구축 과도기 단계에 있어서는 군부의 정치적 위상을 어느 정도 강화함으로써 군부의 지지를 그의 권력 공고화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김정일은 군부에 대하여 그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과도기 적으로 ‘당근과 채찍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이 1980년 이후 군을 정치영역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여 군이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같이 김정일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체제의 正統性和 권위의 쇠퇴 가능성

일반적으로 군지도자와 문민 지도자 간에 문민의 통치 및 문민제도들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일치가 존재할 때 비로소 군에 대한 문민통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⁹³⁾ 다시 말하면 어떤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정통성과 권위를 획득하게 되면 군에 대한 문민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93) Claude E. Welch and Arthur K. Smith, *Military Role and Rule: Perspectives on Civil-military Relations* (North Scituate, Mass.: Duxbury Press, 1974), pp. 29, 249;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pp. 192~263.

정권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정통성을 향유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의식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 정권의 권위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그 정권은 자연히 정통성을 잃게 된다.

북한에 있어서 노동당이 유일적으로 통치할 권한을 가지며 인민들은 당의 지도에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김정일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위업은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전진하고 승리하여 왔으며 그것은 앞으로 당의 령도밑에서 빛나게 완성될 수 있다”⁹⁴⁾고 하여 당의 유일적 영도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당의 최고 지도력을 운용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며 개선해 감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도자로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지녀온 것은 김일성 ‘수령’이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우리당은 전체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조직 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회정치생명체로 결속하였다”⁹⁵⁾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지지도는 “열렬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전해진다. 북한 주민의 60~70% 이상은 김일성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으며 많게는 99%의 주민이 김일성에 대한 지지를

94)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13.

95) 위의 책, p. 314.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⁹⁶⁾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이처럼 지지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서 ① 항일운동을 주도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점, ② 한국전쟁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다는 점, ③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업적 등이 지적된다.⁹⁷⁾

김일성에 대한 이러한 지지도는 자연히 그의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로 연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당·군 융합관계라는 북한의 안정적인 민·군관계가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은 그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기 위하여 일찍부터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그의 지도권을 단계적으로 확보했다. 그의 지도권은 우선 선전선동 부문에서 출발하여 경제부문, 군사부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⁹⁸⁾ 1980년 10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되고, 김일성이 사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김정일은 북한 사회의 전분야에

96)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88~89.

97) 위의 책, p. 89.

98)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 기반,”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 pp. 11~55.

서 김일성 다음의 2인자 지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여러 측면에서 김일성의 정통성과 권위의 공백을 메꾸는데 많은 장애물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 먼저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가 김일성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지적된다.

첫째, 김정일은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없으며 지도자적 자질이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점과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지도자적 자질이 없다. 특히 항일무장투쟁 경력도 없고 군사지휘 경험도 없는 김정일을 군사 최고지도자로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경제가 침체되고 주민의 생활이 나빠지게 된 것이 김정일의 등장에 크게 기인한다고 믿고 있는 주민이 많다.

셋째 품모에 있어 김일성과는 달리 지도자적 특성이 결핍되었다.⁹⁹⁾

김정일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김정일을 지지하지 않거나 질시하는 사람들의 논거에서부터 도출된 것이지만 그것은 그의 정통성과 권위 구축을 위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99)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p. 92.

단의 부정적인 요소임에는 틀림 없다. 김정일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약화 또는 제거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하여 그의 정통성과 권위가 붕괴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김정일의 정통성과 권위가 약화 또는 상실될 경우 이것은 이제까지 지속되어 온 안정적인 당·군 융합관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즉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의 쇠퇴는 군부가 당·군 융합관계를 깨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 동기의 하나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평 가

북한 군부의 정치개입(military intervention)을 자극할 가능성을 지닌 몇몇 요인들을 김정일 정권과 결부시켜 분석해 본 결과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 쇠퇴’ 요소를 제외한 여타 요소들은 이제까지 견지되어 온 북한의 안정적인 당·군 융합관계 상태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승계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군대의 지속적인 지지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에 유지해 왔던 군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군의 상대적인 지위제고를 통하여 군의 충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내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군의 자율성이 군벌 이익주의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군에 대

한 정치사상화 교육과 당적 통제기능을 강화하면서 군의 정치적 역할(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의 정후보 위원으로서의 참여)은 가능하면 축소시켜 나갈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과도기 적으로는 그의 권력을 공고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군의 위상을 어느 정도 높여나감으로써 군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지지를 유도해 나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김정일 정권하에 있어서 국가적 통일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군사적 핵심가치가 도전을 받게 될 경우 북한 군대는 군 자율성을 해친다고 해서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 소요사태로 인하여 당의 유일적 지배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군동원이 요구될 경우 군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정치적 참여는 유일적 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인 바,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돌출행위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군대의 정치화는 당·군 융합관계를 해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의 정치화는 유일적 당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 있어서 군을 당의 지도노선을 옹호하는 대중적 세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군내 정치사상화교육이 강화되어 온 반면 군의 정치적 세력 형성의 위험

성을 안고 있는 당정치조직 기구 내의 참여 범위를 인위적으로 줄여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북한 군대의 정치화 → 군의 정치개입 범위 확대 → 군부 쿠데타 가능성 증대라는 공식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북한 군대의 정치화는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역시 ‘인간’ 즉 ‘사상’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군을 당에 융합시켜 나가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사후 방송강좌를 통해서 김정일이 군에 대한 사상의식 강조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다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이와같은 역할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쟁의 운명도 사람의 사상의식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김정일 정권하에서도 사상의식 고취를 중심으로 한 군의 정치화를 강화하여 군부 쿠데타와 같은 돌출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의 안정적인 당·군 융합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당지도부의 정통성과 권위의 쇠퇴 문제이다. 앞에 지적한 세 요소들은 김정일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정통성과 권위의 문제는 인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일 정권이 정통성과 권위창출을 위해서 침체된 경

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더라도 기본적인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가 쇠퇴한다는 것은 당의 유일적 권력체계가 붕괴됨을 의미한다. 유일적 권력체계의 붕괴는 당·군 융합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군대는 그들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자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부터 비로소 북한 군부의 정치적 개입, 즉 군부 쿠데타의 문제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第Ⅳ章 結論: 북한軍部の 쿠데타 가능성 및 유형 전망

非공산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民·軍關係 연구는 군부에 대한 문민의 통제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서구 민주주의모델에 있어서 군부와 문민 지도자는 갈등과 경쟁관계적 속성을 지녔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문민권력과 군부는 분명히 구별·분리되어 있는 제도들이며, 이들 제도는 상이하고 갈등적인 각각의 고유이익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설이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이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당·군관계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군부는 당 최고권에 도전하는 행위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군사 내부적 문제에 그 스스로의 존재를 한정하며, 주로 당의 군사전문적 정책결정에 참여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산주의 사회의 당과 군부는 사회 또는 국가적 문제에 있어서 공생관계에 있다. 당과 군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兩者間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兩制度間 이해의 갈등이라기 보다는 내부 당적 견해 차이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군은 전체 해당하는 당의 한 부분인 것이다. 군부 내에 정치 및 당적 기구가 있다는 것은 군부가 당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의 대부분의 군고급장교들은 당원

일 뿐만 아니라 군이 당중앙에 있어서 일정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군부엘리트가 곧 당의 엘리트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군부엘리트들은 그들이 완전히 복종하는 당중앙의 한 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당·군 관계는 민·군관계라기 보다는 全體(the whole)와 部分(the part)간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결국 당에 의한 군의 통제 또는 지도라는 개념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복종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部分으로서의 軍部는 전체에 해당하는 당에 대하여 정치적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¹⁰⁰⁾ 당의 정치적 지도권에 대한 군부의 복종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당의 체계모니는 군부에 의존하지 않고는 달성 및 유지될 수 없다. 당과 군부의 협력은 체제의 안정과 존립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군부는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당의 고위 파트너 및 제휴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는 정치에의 군부참여를 완전 배제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적 참여는 주어진 시기에 어떤 국가의 당지도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예

100) Cheng Hsiao-Shih, *Party-Military Relations in the PRC and Taiwan* (Oxford: Westview Press, 1990), p. 150.

를 들어 당중앙위원회에 있어서 군부가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구소련(1931~61년 약 10% 정도), 헝가리(1948년 2%, 1970년 5%), 체코슬로바키아(1949년 8%, 1971년 6%)는 안정적이며 비교적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쿠바의 경우 1965년에는 70%로 군부의 중앙위 참여가 거의 압도적이었으며, 1975년에는 38% 정도를 기록함으로써 이전보다 거의 반으로 하락하였다.¹⁰¹⁾ 중국의 경우는 군부의 당정치기구에의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들쭉날쭉한 특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국 당정치국과 중앙위 참여 비율은 1956년 8차 당대회: 35/35%, 1969년 9차 당대회: 52/42%, 1973년 10차 당대회: 40/24%, 1977년 11차 당대회: 57/31%, 1982년 12차 당대회: 43/22%, 1987년 13차 당대회: 19/11%).¹⁰²⁾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국과 같이 비교적 높은 비율(1946년 1차 당대회부터 1980년 6차 당대회까지 평균 비율은 당중앙위: 21%, 당정치국: 36%)로 군이 당중앙위 및 당정치국에 참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군부가 당정치국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것이 앞의 연구(<도표 4, 5, 6> 참조)에서 규명된 바 있다.

101) Ibid., p. 151.

102) 兪雨霖, “共軍與中共政治: 歷史的角度,” 「東亞季刊」, 제18권 제2기 (1986.10), p. 53.

군부의 정치참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체(당)에 대한 부분(군부)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전체(당)와 부분(군부)의 경계가 모호해 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부의 정치적 역할 비중에 변화를 주는 주체는 군부 자체의 의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체에 해당하는 당 자체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군부의 정치적 참여 비율이 높다고 해서 군부가 당의 지도원칙을 깨뜨리고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의 당지도자들은 당내 군부의 지나친 정치적 세력 확대를 우려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체제의 안정기(체제유지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군부의 정치적 참여 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콜튼과 같은 학자는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군부의 정치적 개입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소련 군부의 경우 원하기만 한다면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고 했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가 당·군 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여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당·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군부 쿠데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군부 쿠데타 가능성의 크기와 유형이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군부에 대하여 통

제와 참여정책을 적절히 구사해 옴으로써 군이 당의 충실한 전위대로 남아있게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몇 공산주의 국가는 이러한 정책에 실패하여 군의 정치적 참여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군부가 어떠한 유형으로 정치개입을 단행하게 되었는가? 공산주의 국가들의 당·군관계가 전체(당)와 부분(군)간의 융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체(당)의 권위체계에 도전하는 형태 보다는 당지도체계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경우 전체(당)를 보호하기 위한 형태의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군부는 당의 지도원칙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당을 위하여 그리고 당의 이름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981년 12월 31일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장군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적 권력장악에 들어간 것은 바로 와해되어가는 폴란드 통일노동자당(공산당)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⁰³⁾ 야루젤스키 장군이 주도한 쿠데타의 목적은 기존의 민간권력(공산당)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당의 권력독점에 도전하는 주요 세력들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¹⁰⁴⁾ 폴란드에 있어서 야루젤스키에 의한

103) Luba Fajfer, "The Polish Military and the Crisis of 1970," *Communism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6, No. 2 (June 1993), pp. 205~25.

군부 쿠데타가 있기 몇달 전부터 폴란드 정부는 軍政化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장성들의 정부 요직 진출, 지방행정 정상화를 위한 군대 파견 등의 조치들이 군사적 권력 장악을 위한 총연습 과정의 일부로 취해졌다.¹⁰⁵⁾ 이는 폴란드의 독립적 사회 운동이자 대중적 열망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솔리다리티가 급격하게 부상하자 반대로 급격하게 붕괴되어가는 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군부의 노력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정책의 실패로 정통성과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인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어 노동당의 권위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할 경우, 군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장군에 의한 쿠데타와 같은 군사적 모험이 강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¹⁰⁶⁾ 그렇다

104) Jacques Rupnik, *The other Europe*, 윤덕희 역, 「오늘의 동유럽」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pp. 209~10.

105) 위의 책, p. 210.

106) 콜튼은 1979년 그의 논문에서 이미 구소련 군부가 원하기만 한다면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당을 위한 또는 당의 명령에 의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Colton, *Commissars, and Civilian Authority*, 참조. 또한 자크 루프닉 역시 공산주의 체제의 쇠퇴가 계속된다면 야루젤스키 장군하의 폴란드와 같은 군사화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가까운 장

면 북한에 있어서 노동당 유일적 권력체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경우 군부는 어떻게 여기에 개입하게 될 것이며 그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 북한의 군부가 원래 당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융합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당내부의 분파주의가 증대함에 따라 북한 군부의 구성과 지향점에 있어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 정권하에서 노동당 내에 다음과 같은 분파주의를 예상할 수 있다. 광범위한 정치 및 경제적 자유주의화를 지지하는 분파, 국가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파 그리고 기존의 폐쇄적 정책을 고수, 체제의 안정화를 주장하는 분파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에 있어서 이러한 분파주의가 언제 어느 정도로 심화될 것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김정일이 대내외적인 難題 해결을 위해서 점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모색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내부의 분열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경제적 지도력에 대한 부정적 평판은 김정일의 정통성과 권위를 크게 부식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

래에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upnik, 윤덕희 역, 「오늘의 동유럽」, p. 211.

다.

노드링거(Eric A. Nordlinger)는 어떠한 정권이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주요한 경우의 하나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꼽고 있다. 그는 경제적 실패는 정통성의 디플레이션을 배태하게 되는 데, 그 이유는 경제성장이 그 정권의 주요한 의무 중 하나이며, 경제적 번영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⁰⁷⁾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자원배분 문제와 對西方 개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정일은 과도하게 투여되어 왔던 군비부문의 투자를 여타 부문(농업 및 경공업 부문)으로 전용하거나 서방의 기술과 자본유입을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 또한 그의 체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제국주의와의 전쟁’ 상황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냄으로써 폐쇄적인 兵營社會를 정당화해 왔다. 김정일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서방 개방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더이상 ‘제국주의와의 전쟁’ 상황 창출논리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북한 사회를 폐쇄적인 병영사회로부터 개방사회로 변모시켜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107) Nordlinger, *Soldiers in Politics*, p. 93.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방사회 추구가 김정일의 정통성과 권위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정일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선택폭이 좁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문제가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김정일의 정통성 붕괴는 곧 유일적 권력체계를 가진 당의 정통성 붕괴로 연결된다. 당의 정통성 붕괴는 곧 당에 의한 全社會(軍포함)의 지도통제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당내부의 분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각 분파의 지도자들은 軍指揮官들을 자기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군부를 분열시킬 수 있다. 북한 노동당 내의 분파주의가 군부 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 군부는 분열된 당지도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를 표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 지도자들은 기존의 정치체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무력으로 응대할 것이라는 의지와 함께 당의 유일지배체계를 수호한다는 것을 그들 군대에 약속할 것이다. 또한 국내 소요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회안전기관(경찰)이나 특별보안기구에 의존할 수 있지만 이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군부가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평정시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군대가 전체적으로 단합하여 분열된 당내의 어느 한 분파를 지원하거나, 둘째, 군대 자체가 분열되어 각자가 산발적으로 정치적 투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시민전쟁 상대), 셋째, 군부 쿠데타 또는 군부가 지원하는 강경보수와 쿠데타 등이 그것이다. 군부의 정치적 개입이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북한 군부는 기존의 유일 당지배체계를 보호 또는 안정화시키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군부는 당의 제도적 권위 자체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나 김정일이 이끄는 당지도부의 정책들에 대하여서는 반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다. 특히 그것이 기존의 당지도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일 경우 이에 대한 군부의 반발은 더할 것이다. 또한 그 당지도부로부터 군부의 支持를 철회하고 새로운 당지도 세력을 지원하거나 군 스스로가 기존의 당지도 세력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군부 스스로가 기존의 당지도부를 대체하게 되었던 폴란드 군대의 정치적 개입(1981년)과 같이 북한에 있어서도 ‘軍服입은 黨’(party in uniform)이 전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동구나 구소련의 예와 같이 사회적 민주화 운동이 지나치게 강력하여 군대의 힘으로도 이러한 민주세력을 꺾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북한 군대는 루마니아의 군

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민주세력의 활동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선회하거나, 아니면 여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군대처럼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여 새로운 지도세력의 권력구축에 순응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비교적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록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능력의 한계로 인민들의 불만이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 세력처럼 조직적이거나 강력하게 분출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북한 인민들의 불만이 분출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산발적이고, 규모 또한 지역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 시민 차원의 사회적 소요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사회안전 및 보안 기구들에 의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며 상황이 보다 악화될 경우 군부대 동원으로 이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북한 군대는 당지도권력을 위하여 사회의 광범위한 소요사태를 무력으로 잠재울수 있는 충성적이고 효율적인 黨의 道具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폴란드나 중국의 경우처럼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군이 동원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사회적 혼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의 진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군이 당의 제도적인 권위에 도전

하거나 통치권한을 거부하고 나서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 現狀維持(status quo)를 위하여 당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군부는 김정일 중심의 당 지도체계의 정통성과 권위가 결정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한 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독자적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당·군 융합관계를 깨뜨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의 분열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부는 당의 제도적 권위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군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폴란드 야루젤스키 장군에 의한 軍部 쿠데타와 같은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존 정권의 顛覆을 의미하는 군부 쿠데타는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제까지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구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은 것과 같은 급격한 체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類의 북한 軍部 쿠데타는 ‘神話’(myth)로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參考文獻

1. 單行本

- 김군태 편.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 서울: 의암출판, 1993.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3.
-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서대숙.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서울신문사 편. 「북한인명사전」. 서울: 서울신문출판사, 1995.
- 신상진 · 전현준.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신정현 · 백종천 편저. 「국가안보론」. 서울: 일신사, 1985.
- 전상인. 「北韓 民族主義 研究」.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鄭光河.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 鄭永泰.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 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 「김일성 저작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

- 출판사, 1967.
- _____ .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 _____ . 「김일성 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2.
- _____ . 「김일성 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 _____ . 「김일성 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 _____ . 「김일성 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 _____ . 「김일성 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 _____ .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_____ .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卓珍 외 2인. 「김정일 지도자」 제2부. 東京: 東邦社, 1984.
- Biench, Henry. ed. *The Military Intervences: Case Studies in Political Develop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 Brill, William H. *Military Intervention in Bolivia: The Overthrow*

- of Paz Estenssoro and the MNR.* Washington, D.C.:
Institute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Systems,
1967.
- Brzezinski, Zbigniew. *Political Controls in the Soviet Army.* Ann
Arbor, Mich.: Edwards Brothers, Inc., 1954.
- Cheng, Hsiao-Shih. *Party-Military Relations in the PRC and
Taiwan.* Oxford: Westview Press, 1990.
- Colton, Timothy. *Commisars, Commanders and Autho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Colton, Timothy. *Commissars, and Civilian Authority.* Cam-
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Cox, Thomas S. *Civil-Military Relations in Sierra Leone: A
Case Study of African Soldiers in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Decalo, Samuel. *Coups and Army Rule in Africa: Studies in
Military Sty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6.
- Fainsod, Merle. *How Russia is Rul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 Garthoff, Raymond L. *Soviet Military Policy.* New York:
Praeger, 1966.
- Gittings, John. *The Role of the Chinese Ar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Goldhamer, Herbert. *The Soviet Soldier*. New York: Crane, Russak, 1977.
-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 . *The Soldier and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 Janowitz, Morris and Jacques van Doorn, eds. *On Military Intervention*. Rotterdam: Rotterdam University Press, 1971.
- Joffe, Ellis. *Party and Ar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er Corps, 1949-1964*.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Kim, Se-Jin. *The Politics of Military Revolution in Kore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71.
- Kolkowicz, Roman.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Lee, Suck-Ho.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9.
- Luckham, Robin. *The Nigerian Military: A Sociological Analysis of Authority and Revol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Malcher, George C. *Poland's Politicized Army: Communists in Uniform*. New York: Praeger, 1984.
- Nordlinger, Eric.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 Rupnik, Jacques. *The other Europe*. 윤덕희 역. 「오늘의 동유럽」.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 Scalapino, Robert A.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Solaun, Mauricio and Michael A. Quinn. *Sinners and Heretics: The Politic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5.
- Thompson, William R. *The Grievances of Coup-Makers*. Beverly Hills, Calif.: Sage, 1973.
- Welch, Claude E. Jr. ed. *Soldier and State in Africa*.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 Welch, Claude E. and Arthur K. Smith. *Military Role and Rule: Perspectives on Civil-military Relations*. North Scituate, Mass.: Duxbury Press, 1974.

2. 論 文

김갑철. “북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박사학위논문, 1976).
-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 (1986.2).
-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 기반.”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1991.
- 安成濩. “동구권 개혁에 따른 북한사회주의노선 변화전망.” 「북한·통일연구 논문집 (Ⅱ)」. 서울: 통일원, 1990.
- 俞雨霖. “共軍與中共政治: 歷史的 角度.” 「東亞季刊」, 제18권 제2기 (1986.10).
- 윤병익. “북한에 있어서의 민·군관계.” 「國防論集」, 제12호 (1990 겨울).
- 이동훈. “북한 군사정책 결정 구조 및 과정과 군비통제의 문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1993.6).
- 이문조·손기웅·배진수. “민·군관계의 역사적 유형과 민·군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략논총」, 제2집 (1994).
- 이석호.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군의 역할.”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이성규. “북괴 당군제도 - 2원화지휘체제는 취약요소인가-.” 「국방연구」, 제26권 제2호 (1983).
- 차두현. “김정일 권력승계체제와 북한군부.” 「국방강론」, 제2집 (1990.9).

河龍出. “중국, 북한, 베트남의 당·군관계 - 북한을 중심으로-.” 김달중·스칼라피노 공편. 『아시아 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서울: 법문사, 1989.

Albright, David E.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32, No. 4 (1980 July).

Colton, Timothy.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Soviet Union: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1 (Autumn 1978).

Fajfer, Luba. “The Polish Military and the Crisis of 1970.” *Communism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6, No. 2 (June 1993).

Fossum, Egon.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Military Coups d’Etat in Latin America.” *Journal of Peace Research*, IV, No. 3 (1967).

Higgott, Richard and Finn Fuglestad. “The 1974 Coup d’Etat in Niger: Towards an Explanation.”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XIII (September 1975).

Kim, C. I. Eugene. “The South Korean Military Coup of May 1961: Its Causes and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Its Leaders.” in Doorn, Jacques van. ed. *Armed Forces and Society: Sociological Essays*. The Hague: Mouton, 1968.

- Kolkowicz, Roman. "The Political Role of the Soviet Military." in Noguee, Joseph L. ed. *Soviet Politics: Russia after Breznev*. New York: Praeger, 1984.
- Lepingwell, John W. R. "Soviet Civil-Military Relations and The August coup." *World Politics*. Vol. 44, No. 4 (July 1992).
- Lofchie, Michael F. "The Uganda Coup: Class Action by the Military."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X (March 1972).
- Needler, Martin C. "Political Development and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0 (September 1966).
- Nun, José. "The Middle-Class Military Coup." in Veliz, Claudio. ed. *The Politics of Conform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Putnam, Robert D. "Toward Explaining Military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n Politics." *World Politics*, XX (October 1967).
- Wolfe, Thomas W. "Political Primacy vs. Professional Elan." *Problems of Communism*, 13 (May-June 1964).
- . "The Military." in Kassof, Allen. ed. *Prospects for Soviet Society*. New York: Praeger, 1970.

3. 其他

「内外通信」, 综合版 第28号.

「근로자」, 1975.2.

「로동신문」, 1991.12.25, 12.28.

「평양방송」, 1995.3.12.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개발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의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3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 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研究報告書 95-10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